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
전략문화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의 메커니즘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이정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시성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
전략문화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의 메커니즘

A Study on the Usefulness of Strategic Culture
in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Mechanism of Perception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Policy Preference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이정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시성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
전략문화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의 메커니즘

A Study on the Usefulness of Strategic Culture
in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Mechanism of Perception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Policy Preference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이 정 완

이정완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 전략문화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국 방 과 학 대 학 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이 정 완

북한은 거의 언제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예상을 빗나가는 도발적 행태를 반복해왔고, 북한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소위 북한(지도부)은 제 정신이 아니라는 심리적 가설(Mad man theory)에 따라 일명 ‘미친 나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그동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와 많은 선행연구들이 북한을 합리적 결정모델이나 비용 대 효과의 최적화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핵 포기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불”이라는 단순한 공식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등 서구에서 북한이 ‘비합리적(irrational)’이며 ‘예측불가능(unpredictable)’하다는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제정치의 주류를 형성해 온 신현실주의적 시각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이러한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인식을 토대로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를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전략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특정국가가 지닌 일정한 사고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 전략문화는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일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특정 국가의 정책성향도 그들만의 구성된 이익에 따라 만들어진 ‘계산된 비일관성’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략문화의 개념은 미국의 정치학자인 잭 스나이더가 1970년대 미국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던 소련의 합리적이 않은 독특한 전략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를 소개하였다. 미국은 핵전쟁에서 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소련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 시달렸던 역사적 경험과 함께 형성된 전략문화가 핵전쟁에서 선제공격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라 결론 내렸다.

마찬가지로 이를 북한에 대입하여 북한정권이 들어선 전후시기에 그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과 이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규범이 북한 핵전략에 미친 영향과 이것을 통해 핵개발 원인의 본질을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틀로써 전략문화 개념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그들이 바라보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략문화이론의 한계점으로 관념변수에 대한 입증과 측정의 문제가 논란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관념변수 자체만 추출하려 하지 않고, 효과적인 분석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주요 텍스트와 북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관념변수)을 염출하여 이것이 전략환경의 인식과 정책선택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함께 작동된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였다. 즉, 세 차례의 북핵위기를 통해 형성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메커니즘과, 관념변수인 중심 패러다임을 연계하여 하나의 분석의 틀로서 구성하고, 경험적 증명을 통해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서 전략문화이론이 가지는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전략문화,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 주체사상, 북핵위기,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 선택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과 범위	3
제 3 절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이론적 고찰	8
제 1 절 핵개발 이론 논의	8
1) 핵무기 획득모델	8
2) 북한 핵보유 목적에 대한 가설과 관련 연구사례	12
3) 기존 이론에 대한 비평적 검토	17
제 2 절 전략문화이론	21
1) 개념	21
2) 전략문화 구성요소: 역사적 경험, 정체성, 규범, 상징, 신념	25
3) 전략문화의 한계 및 보완	29
제 3 장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과정과 중심 패러다임	31
제 1 절 북한의 역사적 경험과 안보 정체성 형성	31
제 2 절 북한의 규범체계: 주체사상의 분석	39
제 3 절 북한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	48
제 4 절 분석의 틀	52
제 4 장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의 메커니즘의 형성	54
제 1 절 제1차 북핵위기(1991~2002)	54
제 2 절 제2차 북핵위기(2003~2008)	61
제 3 절 제3차 북핵위기(2009~2018)	73

제 4 절 소결론	81
제 5 장 결 론	83
참 고 문 헌	88
ABSTRACT	92



표 목 차

[표 2-1] 핵개발 원인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17
[표 3-1] 북한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	51
[표 4-1] 제네바 합의에 이르는 과정(1988~1994)	57
[표 4-2]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의 도발 일지	63
[표 4-3] 제2차 북핵위기로의 과정(2002~2003)	65
[표 4-4] 6자 회담의 과정(2003~2008)	67
[표 4-5] 북한 핵실험 빈도 분석	77
[표 4-6] 제1~3차 북핵위기의 북한 핵정책 경로(1991~2018)	82



그 림 목 차

[그림 3-1]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40
[그림 3-2] 주체사상의 체계	42
[그림 3-3] 분석의 틀: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메커니즘	53
[그림 4-1] 제1차 북핵위기 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59
[그림 4-2] 제2차 북핵위기 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71
[그림 4-3] 북한의 정권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현황	78
[그림 4-4] 제3차 북핵위기 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7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제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8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이었다. 당초 2차 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주변국들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은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틀째 회담에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 실패로 결렬에 이르렀다.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 합의를 이룬바 있었다. 그러나 1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첫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포괄적인 합의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을 위한 후속 조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비핵화의 범위와 제재완화 수준 문제를 놓고 북미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는데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전면적인 비핵화를 통한 일괄타결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국 간 비핵화 프로세스는 또다시 멈추며 향후의 북미관계가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지, 협상의 진전과 합의의 이행 여부에 따라 새로운 미래가 개척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도는 제1차 북핵 위기인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있었고, 2002년 제네바합의가 붕괴된 이후에도 있었으며,

이후 2003년 8월 6자회담이 출범한 이후에도 몇 차례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뿐이었다.

북한이 벼랑 끝에서 상황을 악화시켜 위기를 조성하면 이에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을 명분으로 포괄적이고 애매한 외교적 수사로 치장된 합의문을 얻어내고는, 기약할 수 없는 미래의 약속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곤 했다. 결국 시간은 북한의 편이었고, 그는 사이 북한의 핵은 무기로서 성능이 향상되고 고도화 되었으며 북한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거의 언제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예상을 벗나가는 도발적 행태를 반복해왔고, 북한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소위 북한(지도부)은 제 정신이 아니라는 심리적 가설(Mad man theory)에 따라 일명 ‘미친 나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가령, 벤자민 길만 공화당 의원은 1999년 10월 13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예측불가능성”을 국제 안보 불안의 가장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화성 15호 발사 직후 린지 그래햄 미 상원의원 역시 “미치광이(crazy man)” 김정은이 미국에 비이성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였다.¹⁾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그동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와 많은 선행연구들이 북한을 합리적 결정모델이나 비용 대 효과의 최적화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핵 포기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불”²⁾이라는 단순한 공식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등 서구에서 북한이 ‘비합리적(irrational)’이며 ‘예측불가능(unpredictable)’하다는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제정치의 주류를 형성해 온 신현실 주의적 시각의 영향³⁾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 Daniel Chaitin, “Lindsey Graham: Trump won’t allow the ‘crazy man’ in North Korea to strike the US.”, Washington Examiner, 2017.11.28., <http://www.washingtonexaminer.com/lindsey-graham-trump-wont-allow-the-crazy-man-in-north-korea-to-strike-the-us> (접속일: 2019. 12.07.).

2) 이용준, 『게임의 종말 :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277.

3) 홍용표,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2.

하지만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이러한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인식을 토대로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를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북한정권이 들어선 전후시기에 그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과 이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규범이 북한 핵전략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틀로써 전략문화 개념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그들이 바라보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국가정체성과 안보에 있어서의 대내외적 전략환경 인식이 무엇인지 좀 더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북한 스스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전략적 선택을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결국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을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해왔는지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전략문화 이론은 북한이 그동안 행동으로 보여준 정책적 선호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 원인에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범위

최근 안보연구 분야에서 문화적 접근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확장하는 이유는 기존의 국제정치를 분석했던 여러 시각들, 특히 신현실주의 중심의 상대적 힘의 균형이론이 간과한 비(非)물질적 변수의 정책 등장에 대한 영향력의 재고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국제체제 속에서 비슷한 군사력을 가지고 국력이 어느 정도 대등한 반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서로 상이(相異)한 형태의 군사력

운용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정책적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의 왈츠가 주장하는 상대적 힘의 분포라는 변수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보유가 필요하며, 영구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함으로써 경제 강국을 건설하여 결정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그동안 각종 주요 성명을 통해 다짐해 왔다. 그러나 2017년 말 핵무력 완성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적 핵확산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급전환하였다. 수십 년간 국제적 압박과 제재를 이겨내고 세계에서 9번째로 만들어낸 핵무기를 담보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수십 년간 집착해 온 것을 손에 넣고도 핵보유의 영구화와 비핵화를 사이에 두고 오고가는 정반대의 언명을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넘어서기 위하여 이를 보완하고 대안적인 방법론인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략문화의 개념은 미국의 정치학자인 잭 스나이더가 미국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던 소련의 정책결정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결론과 함께 소련의 그러한 독특한 전략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를 소개한 1970년대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스나이더는 자신의 저서인

『소련의 전략문화(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에서 전략문화를 “개념, 조건적인 감정적 반응, 그리고 한 국가의 전략적 공동체가 훈련이나 모방을 통해서 획득하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⁵⁾

다음 장에서 전략문화 이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략문화 이론은 그간 학계에서 이론적 정교화와 실제의 적용에 있어 많은 논쟁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스나이더의 정의를 비롯하여 2세대, 3세대 연구자들을 통해서 정리된 이 이론의 기본적인 주장은 “특정국가의 군사

4) Alastair Iain Johnston,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Spring, 1995a), pp.34~35.

5) 로렌스 손드하우스 지음, 『전략문화와 세계 각국의 전쟁 수행 방식』, 이내주 옮김, (서울: 화랑대연구소, 2007), p.15.

또는 안보영역에서 정책 결정의 선택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같은 고유의 관념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객관적인 현실 속 이익과 구조적인 변수에 부합하지 않아도 해당 국가의 전략 문화 속성에 영향을 받은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정책적 선택의 폭을 좁히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특정 성향에 집착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대·내외적 환경과 이익의 조건에 놓여 있는 국가들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 전략문화 이론이 기존 합리적 결정이론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 되는 특성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물리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온 합리주의 혹은 물질론적 방법론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보다 유용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상당수 선행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분명 ‘예측 가능한’ 패턴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⁶⁾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러한 전략문화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전략문화 연구과정(개념과 방법론)에서 나타나는 전략문화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그것이 북한의 전략문화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략문화 이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연구의 분석수준과 시기의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비록 한 국가의 전략문화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국가의 모든 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화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문맥(context)을 형성하는 것일 뿐, 높은 수준의 인과성(causality)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의 중점은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전략문화라는 변수를 통해 바라보기 위함이지 북한 전체의 전략문화에 대해 포괄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균질화하거나 과잉 일반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 있어서 분석수준의 범위는 국가전략 및 정책적 수준에서, 시기는 제1차 북핵위기에서 제3차 북핵위기의 기간 동안 북한이 핵개발에 있어 어떤 대-

6) 황일도 “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행태: 핵무기 개발, 재래식전력 배치, 연평도 포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2), pp.5-6.

내외적 전략적 환경 인식을 통해 정책적 선택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 형성 단계를 구체화하고, 그러한 인식의 틀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에 대한 분석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시간적 범위로 정한다.

최근의 전략문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전략문화를 도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저작물로 정책결정자들에게 기준의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텍스트(text)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어느 국가 내부에서 형성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나 신념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성문화되거나 기록되어 계승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손자병법’, 인도의 경우 ‘카우틸랴(Kautilya)의 전략론’, 서구의 경우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등이 전통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자주 활동됐던 키 텍스트(Key Text)에 해당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존스턴(Johnston)은 중국 전략문화에 대한 자신의 연구⁷⁾에서 무경칠서로 불리는 중국의 7대 고전 병법서를 주요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도 이러한 방법론을 수용하여 북한의 전략문화를 도출할 수 있는 키 텍스트로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선택하였다. 북한의 주체사상이야 말로 북한의 사상적·문화적 중심 규범으로 그 역할을 해 온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소위 정책엘리트 그룹인 북한 지도부와 주요 정책결정자들 인식 속에 공통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분석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주요 텍스트와 북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을 염출하였다. 존스턴은 전략문화에서 핵심요소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바로 위협 인식과 신념을 구현하는 ‘중심적 패러다임’ 및 우선순위가 매겨진 전략적 선호들의 대형 뮤음으로 이루어진 중심적 패러다임의 산물인 경험의 흔적이다.⁸⁾ 후자에서 언급한 경험의 흔적을 증명하고자 이런 중심 패러다임을 실제 역사적 사례(제1~3차 북핵위기)에 적용하여 각 시기별로 어떠한 관념적 요소

7)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e realism :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b).

8) 로렌스 손드하우스 지음, 이내주 옮김, 앞의 책, p.231.

로 기여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형성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메커니즘이 중심 패러다임을 연계하여 하나의 분석의 틀로서 구성하고, 경험적 증명을 통해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서 전략문화이론이 가지는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앞서 제1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현 실태를 되짚어보고 전략문화이론의 관점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다루었다.

제2장은 북한의 핵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전략문화이론이 갖는 적절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핵개발에 대한 기준이론들의 의의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기존의 시각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던 북한 핵개발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일정한 패턴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보완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전략문화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북한의 전략문화가 어떤 전략문화의 원천에서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경험의 사례로 항일무장투쟁과 6·25전쟁을 들어 북한의 안보정체성 형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전략문화의 규범으로서 주체사상을 분석하여 어떠한 규범적 요소가 북한의 전략문화에 작용해 오는지 파악하고,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을 추출해 내어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분석의 틀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 때 분석 시기는 제1차 북핵위기에서 제3차 북핵위기이며, 각각의 시기별로 전략환경과 정책선택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또 그 속에서 북한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이 분석의 틀에서 가설대로 적용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선 문제제기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북핵 위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략문화의 이론이 얼마나 유용한지 함의를 도출하여 이 이론이 가지는 앞으로의 북핵문제 분석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 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핵개발 이론 논의

1945년 최초의 핵무기가 미국에 의해 개발된 이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총 9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제정치의 핵심적 문제로 핵무기 확산이 대두되었다. 과연 이러한 핵확산 현상이 세계안보와 질서에 안정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복잡한 힘의 관계로 인해 더욱 불안해질 것인가.

핵확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 국제정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그 이유는 핵확산 현상을 분석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핵확산을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연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장에서는 국제적 핵확산금지 레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론적 모델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따라 특히 북한이 왜 핵무기를 획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가설들과 그에 입각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핵무기 획득 모델⁹⁾

세이건(Scott Sagan)은 국가가 핵무기를 획득하고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로 국제적인 위협 때문이라는 안보모델과 이외에 다른 요인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국내정치 모델과 규범 모델 두 가지를 더 제시하였다.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본질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무정부적인 국제체제 내에서 위협적인 주변국에 둘러싸여 있거나

9) 여기서는 세이건(Scott Sagan)이 제시한 3가지 모델과 기술결정론을 포함하여 4가지로 설명함.

특정 핵무기 보유국가와 뚜렷한 적대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핵 억제력(힘의 균형)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핵무기 획득 모델 중 안보 모델, 즉 핵보유의 이유를 안보적 동기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며, 그동안 학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이 모델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안보적인 측면의 동기에 따라 핵무기를 획득하는 경우(잠재적 획득의 경우에도)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폭탄을 제조했다.
- 소련은 미국에 의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핵폭탄을 제조했다.
-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에 의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핵폭탄을 제조했다.
- 중국은 미국과 소련 양자에 의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핵폭탄을 제조했다.
-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핵폭탄을 제조했다.
- 인도도 중국에 의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핵폭탄을 제조했다.
- 파키스탄은 인도에 의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핵폭탄을 제조했다.
-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핵폭탄 제조를 선택했다.
-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의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핵무장 가능성이 있다.¹⁰⁾

첫째, 기존의 안보 모델은 국가가 국가안보적 이유 때문에 핵무기를 제조하고 보유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주장은 정확히 현실주의 이론적 전통에 부합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 A는 다른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국가 B로부터의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획득하려 한다. 국가 B가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 A는 핵무기를 보유한다. 역으로, 만약 국가 B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 A는 이론적으로 핵무

10) 앤드류 퍼터 지음, 『핵무기의 정치』, 고봉준 옮김, (서울: 명인문화사, 2016), p.79.

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다.¹¹⁾ 그러나 이 모델은 국가안보에 대한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강력한 핵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국내정치 모델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국내정치의 관료적 이해 때문에 핵무기를 제조하고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이익집단이 선거상의 목적이나 여론의 지지를 위하여 핵 이슈를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다른 사례는 특정 부처와 거대 산업체, 군 당국이나 그 내부의 특정 군에서 핵 프로그램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국내정치 행위자들이 연합하여 직접적인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핵무기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핵무기를 지지하는 정치 행위자들이 연대하는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증명해 주는 국내정치적 이론이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규범모델은 특정 정책결정자나 전략공동체가 핵무기가 제공하는 국가적 위신과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는 바로 그 국가의 국력의 표상이며, 근대화의 상징이자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동일시한다.¹²⁾ 즉 국가행동이 국가안보에 대한 합리적 계산이나 국내정치적 관료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적으로 그들의 관념적 인식 속에서 중요하다고 공유된 신념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넷째, 세이건의 모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 널리 인용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메이어(Stephan M. Meyer)¹³⁾가 주

11) 앤드류 퍼터 지음, 고봉준 옮김, 앞의 책, p.81.

12)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Winter 1996-1997), pp.54-86.

13) 메이어는 핵확산의 원인을 기술이론과 동기이론으로 체계화하여 설명하였다. Stephan M. Meyer,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9-16.

장한 기술결정론인데, 이는 기술과 자본 등 핵무기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적 수단들이 구비된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핵무기는 기술발전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는 주장이다.(수요 보다는 공급에 무게를 둠) 이 모델에서는 안보와 정치, 정체성과 관련없이 기술적 발전만이 핵무기의 획득과 그 투발수단과 탄두의 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한다.¹⁴⁾ 그러나 이 이론은 그동안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수많은 국가들 모두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위의 세이건의 3가지 모델이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7년 3월 정부 비망록을 통해 “선군 조선의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달러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 마당과 협상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는 걸 엄숙히 선포했다. 또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의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 조선의 국보”¹⁵⁾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자국이 보유한 핵을 외부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체제 안정을 위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정치적 기제이자, 국가적 정체성과 위신의 상징으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제조하고 보유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어서 서로 다른 이유들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안보모델이 지배적인 설득력을 가지지만 규범모델에서 제시하는 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라면 안보우려를 해소 해 주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관념, 적대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관, 현상타파적인 성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신념체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비핵화

14) 앤드류 퍼터 지음, 고봉준 옮김, 앞의 책, p.81.

1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노동신문>, 2017.3.31.

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2) 북한 핵 보유 목적에 대한 가설과 관련 연구사례

핵무기 획득 모델에 이어 이번 절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목적에 대한 주요 가설들과 그에 입각한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빅터 차 (Victor D. Cha)는 북한의 핵개발 목적에 대해 4가지 가설로 설명하였다.¹⁶⁾ 4가지 가설은 정권안보와 체제생존을 위해 핵억제력을 통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방어적 군사목적설과 미군의 개입을 저지하고 한반도 혜계모니를 장악하여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보는 공격적 군사목적설,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과의 협상과 편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외교목적설, 그리고 핵무기를 정권의 명성과 지위, 권력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정치적 동기설이 있다.

방어적 군사목적설은 역지이론과 결합된 왈츠(K. Waltz)의 신현실주의와 세이건의 안보모델에 근거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안보 취약성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이유를 찾는다. 국제질서가 무정부 상태이고 생존(안보)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인 이상 국가는 국제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스스로 자조적 수단을 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왈츠는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적 자조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북한이 위협받고 있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동기 또한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즉, 방어적 군사목적설은 국제질서의 무정부적 특성은 북한에게 이러한 안보위협의 인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억제수단으로 핵무기 이외에는 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의 목적을 설명한다.

16) Victor D.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2(Summer 2002), pp.209-230.

공격적 군사목적설은 미어샤이머(John Mear 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설로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목적이 한반도의 헤게모니 장악에 있는 것으로 본다. 군사목적설의 좋은 예는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서 잘 드러나듯이, 북한 노동당의 최대 목적과업이 남조선의 해방과 적화통일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1950년대의 한국전쟁에서 1차적 실패를 경험 했지만, 그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2차적 목적달성을 매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군의 개입을 철저히 저지하고, 한반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여만 목적을 이룰 수 있음으로, 재래식무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의 하나로 핵무력 노선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외교목적설은 체제의 발전과 생존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나의 외교적 협상카드로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원인을 설명한다. 이러한 외교목적설에 따르면 북한은 핵확산을 통해 체제안정보장, 경제적 보상,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로의 편입 등을 얻기 위한 협상에서의 실리를 강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은 서로가 선호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고 있지만, 서로가 선호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여주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즉, 북한과 미국은 서로가 회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서로가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극단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실리를 취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유도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의 목적의 또 하나의 가설로 정권의 지위와 명성, 정치적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재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정치적 동기설이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나 전략공동체가 핵무기가 제공하는 국가적 위신과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규범모델과 관련이 있다. 규범모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동기설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 또는 중요한 국가로서 인식되어 명성을 얻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체제정당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체제생존을 보장 받기 위해 핵확산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내부적인 불만 요인을 무마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핵을 통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와 북한 정권의 명성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인민의 지도자가 행동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선전선동의 대외적 요소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다음은 이러한 4가지 가설과 맥락을 일치하는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에 앞서 기존연구들과 4가지 가설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한 제시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4가지 가설들은 핵개발 원인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방어적·공격적 군사목적 설과 외교목적설은 외부적 요인으로, 정치적 동기설은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외부요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원인을 미국과 주변국들의 전략이나 북한 외부의 전략적 환경에 의한 외부자극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며, 내부요인은 북한의 핵개발 원인이 복합적인 국내적인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국내 연구들은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를 하겠다.

먼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주요 국내 연구로 임수호, 백정미, 손용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임수호의 연구는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억제와 강제를 동시에 추구해 온 과정으로 분석하였다.¹⁷⁾ 북한의 핵정책이 군사적 억제의 목표나 외교적 강제의 목표 어느 하나의 일방적 추구가 아니라, 양자의 동시추구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가 중첩되는 이중위기의 구조 때문이라 본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로 든든한 후견국이 사라졌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압도적 군사력 우위에 자체적으로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에 대한 강한 이해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장기적 생존을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 포기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안보와 경제의

17)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1989~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북한은 최소한의 핵능력을 유지하고 이를 외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억제와 강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동시추구는 핵 확산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공존하는 “협상을 통한 확산”의 현상을 낳았다는 것이다.¹⁸⁾

백정미의 연구는 현실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분석하였다.¹⁹⁾ 제2차 북핵위기 이전에는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가며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과 이라크 전쟁 이후부터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핵무기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6차례의 6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제1차,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그동안 핵보유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며 핵무기 보유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않는 정책(NCND)’을 포기하였다. 이를 백정미의 연구에서는 제2차 북핵위기를 전후로 북한의 핵개발 정책이 방어적 현실주의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손용우의 연구는 북한의 핵정책을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북한의 핵개발 원인에 있어 생존과 안보를 가장 핵심개념으로 보고 있다.²⁰⁾ 북한의 핵개발 시기를 크게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핵개발의 주요 동인을 추출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북한 핵정책의 작동 원리와 특징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생존, 안보의 극대화, 자력구제, 그리고 안보딜레마 등이 북한 핵정책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며 핵심개념이라고 논증하고 있다. 핵개발의 근원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안보위협이고, 북한은 생존과 안보를 위한 자력구제의 추구 차원에서 핵 확산의 일관성을 보인다며 결국 북한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적 구조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무장 추구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¹⁾

18) 임수호, 앞의 논문, pp.4-12.

19) 백정미,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핵개발 결정요인과 향후 과제,” 『국가위기관리학회 보』, 제6권 1호 (2014).

20) 손용우,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21) 손용우, 위의 논문, pp.34-37.

다음으로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주요 국내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문장권의 연구는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정치적 동기 측면을 간과하고,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동기 측면만을 너무 강조해 왔다고 주장한다.²²⁾ 제1차 북핵위기부터 제3차 북핵위기까지 시기별 북한 핵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제1차 북핵위기는 자주권 수호, 제2차 북핵위기는 자주권 강화, 제3차 북핵위기는 자주권 공고화라는 북한의 정치적 목표가 북한 핵개발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은 정치적 동기설이 주요 요인이고, 안보와 경제적 측면은 부차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경애의 연구는 국가행위가 권력배분의 국제구조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에 대한 반응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특히 북한과 같은 제3세계 국가의 경우 권력의 승계, 체제의 생존 등에 민감한 국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였다.²³⁾ 그동안의 연구가 안보 논리에만 치우쳐 국내정치 요소의 중요성을 너무 저평가하였으며, 식량·에너지 부족과 경제침체,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기인한 체제내부의 불안정 등 내부적 위협요소들에 의해 북한 핵개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남궁영의 연구²⁴⁾는 북한의 핵개발을 다른 목표를 위한 도구라고 보는 관점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북한 핵정책의 한 원인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고 본다. 핵무기 보유는 김일성 재임 기간 북한의 과학기술 진보를 가시적으로 증명하여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을 고양하고, 김정일로의 정권승계에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본인 사후 남한이 북한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공격할 가능성을 줄여 체제의 존속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²⁵⁾했을 것이라 분석하

22) 문장권,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23) Kyung-Ae Park, “Explaining North Korea’s Negotiated Cooperation with the U. S.,” *Asian Survey*, Vol. 37, No. 7(Jul., 1997).

24) 남궁영, “북한 핵개발과 미국: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 Vol. 13, No. 2(2003).

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들의 핵무기 획득모델과 북한 핵개발의 원인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핵개발 원인 분석에 대한 기준연구

요인	핵무기 획득모델 Scott D. Sagan	북한 핵개발 4가지 가설 Victor D. Cha	이론적 기반	핵 확산 이론 (Meyer)	관련 국내 연구
외 부	안보모델	방어적 군사목적설	방어적 현실주의 (왈츠)	동기이론	임수호 백정미 손용우
		공격적 군사목적설	공격적 현실주의 (미어샤이이며)		
		외교목적설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Tit-For-Tat)		
내 부	국내정치 모델	정치적 동기설	자유주의	기술이론	문장권 박경애 남궁영
	규범모델		구성주의		
			구조주의		

*출처: 임수호, 앞의 논문, p.14. 앤드류 퍼터, 고봉준 역, 앞의 책, p.83. 을 참고하여 재작성.

3) 기준 이론에 대한 비평적 검토

지금까지 살펴본 기준 연구결과들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한 관점으로 나누어 비평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부적 요인 관점으로 분석한 기준연구들은 대체로 간결하고 명확한

25) 남궁영, 앞의 논문, p.112.

답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핵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안보위협 요인은 합리적 선택 측면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 연구들은 북한의 핵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외부적 자극 요소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변국과의 관계나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을 분석 하였는데 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압적 외교라는 자극을 중요한 외부적 자극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으로 분석을 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대외정책 행태를 단순히 외부요소에 의한 ‘대응’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북한 내부의 정치학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외부의 위협요소가 사라졌을 때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로 제1차 북핵위기 이후에는(제네바 합의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소극적 안전보장(NSA) 정책으로 북한의 대외적 환경이 호전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고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줄어들어야 했으나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체제의 생존 보장과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들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외치며 핵 확산에 몰두하여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또한 NPT 체제가 완성된 아래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온 사실로 볼 때 당시 북한의 핵확산 시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억제의 수단으로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의 붕괴로 인해 힘의 균형이 무너진 국제적 상황에서 당시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인식을 느꼈을 국가가 북한에만 해당 되었겠는가. 당시 쿠바나 베트남 등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강한 동맹을 잃고 힘의 공백에 대한 위협을 비슷하게 느꼈을 것인데 이들 국가에 비하여 북한이 더 강한 핵 보유 동기를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냉전의 붕괴와 그 결과로 발생한 힘의 불균형이 핵개발 원인의 핵

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북한에게 어떠한 인식과정에서 그러한 정책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보인 공격적인 태도나 여섯 차례나 되는 핵실험으로 그들의 핵능력의 발전과 고도화를 의도적으로 과시했던 행동은 이것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북한이 그러한 위협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할수록 한미연합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하고, 최첨단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의 군사적 조치를 감행하여 현재까지 남과 북의 재래식 전력에서의 격차는 더욱 증대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을 뿐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관점과는 다르게, 내부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은 북한의 핵정책의 전개과정이 외부적 요인들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핵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자체를 독립변수로 보고 체제 내부적인 상황을 핵개발과의 연계성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요인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들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준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들이 불충분하여 연구의 일반화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기에 매우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다.²⁶⁾ 그리고 다른 연구들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적 측면과 북한 내부 사회적 작용 측면까지 폭넓은 접근을 시도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왜 그러한 인식구조를 갖게 되었는지를 논리전개 과정에서 생략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핵 보유를 부인하다가 갑자기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반된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데, 기존연구들은 북한이 핵보유를 정당화해 나가면서 겪어온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에 다소 미흡점이 있다. 즉, 북한의 핵능력 변화에 따른 핵 효용의 변화, 이것이 대·내외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비평적 검토를 토대로 북한의 핵개발

26) 권효립·김용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인지적 접근: 제1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4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p.101.

원인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찰해 내기 위하여 전략문화 이론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분석하여 이 이론이 가지는 유용성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앞서 제1장의 연구방법을 통해서 본 논문이 전략문화의 이론을 적용하여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내용전개를 할 것인지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는 전략문화 이론 자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본 논문의 목적과 논리구조를 뒷받침하는 이론의 타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전략문화이론

1) 개념

어느 국가든 현재의 정치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중요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 정치체계의 구성과 기능 및 절차들이 국가의 역사적 변천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성과 발전은 그 국가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²⁷⁾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풀레(Guy Oliver Faure)와 러빈(Jeffrey Z. Rubin)은 『Culture and Negotiation: the resolution of water disputes』라는 저서에서 문화를 한 국가, 민족, 또는 공동체들이 공유하는 특징적인 의미, 가치, 신념의 구성이며 구성원들의 행위를 정한다고 정의하였다.²⁸⁾ 따라서 문화는 광의적으로 허용된 신념체계이고 이것은 학습되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문화는 인간과 인간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환경과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은 문화에 의해 제공된 신념과 가치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한편 애벌락(Averach)과 블랙(Black)은 문화를 정의하는데 있어 두 가지 접근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문화를 인간이라는 집단이 거주지 또는 생태계에 적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유물론적 접근과, 세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집단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유심론적 접근이다.²⁹⁾ 그리고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정리하여 문화는 개인과 집단이 내·외적인 환경 세계에 대해 갖는 “공유된 지역적 상식”이라는 가정으로 구체화될 수

27) Clifford Geertz, “Religion as a System,”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p.89.

28) Guy Oliver Faure, and J. Rubin(eds), *Culture and Negotiation* (Newbury Park, CA.: Sage, 1993).

29) Averach and Black, “The Culture Question and Conflict Resolution,” *Peace and Change*, 16-1(1991), pp.22-45. 조윤영,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국제관계 연구: 갈등해소와 협상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p.54에서 재인용.

있고, 인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식으로서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환경을 자각하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유된 지역적 상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³⁰⁾

마자르(Michael J. Mazarr)는 보다 넓은 의미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의 영향에 대하여 첫째, 삶의 장치로서의 문화, 둘째, 인식의 여과장치로서의 문화, 셋째, 사회·경제적 영향으로서의 문화, 넷째, 문명의 충돌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³¹⁾

이러한 문화적 접근법을 배경으로 하는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는 문화와 전략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시각으로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전략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잭 스나이더는 1977년 소련의 핵전쟁 독트린을 분석하기 위해 전략문화이론을 개발하여 근대 안보 연구에 문화를 도입하였다. 스나이더는 냉전 당시 핵군축과 관련하여 똑같이 주어진 안보환경에서 왜 미국과 소련이 각기 다른 행동패턴을 보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때까지 핵전략에 대한 지배적인 접근법은 합리적 효용성에 근거한 계량경제학적 처리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은 전략핵 분야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계산된 반응을 하는 합리적 행동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스나이더가 주목한 것은 소련의 핵전략을 설명하려면 일반적, 합리적 인간의 행동 기준에 의해 분석하기보다는 소련 정책결정론자 당사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핵전략에 관한 일련의 신념, 태도 및 행동패턴이 단순히 정책이라기보다 한 국가의 ‘문화’적 차원으로 자리 잡아 반영구적 지위를 획득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 소련의 핵전략 분석에서 스나이더의 대안적 접근방법은 두 국가 간의 뚜렷한 전략 문화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스나이더는 소련의 군부가 힘의 선제적·공격적 사용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고, 이것은

30) 조윤영,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국제관계 연구: 갈등해소와 협상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pp.54-55.

31) Michael J. Mazarr,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 Review Essay,” *Washington Quarterly*, Vol. 19, No. 2(1996), pp.178-182.

러시아의 불안정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역사에서 발견된다고 하였다.³²⁾

여기에서 스나이더는 “전략에 관한 사고를 유도하고 경계를 지으며, 전략적 이슈가 공식화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전략적 논쟁의 어휘와 인식적 한계를 설정하는 태도와 신념의 실체”를 묘사하기 위해 ‘전략문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³³⁾

전략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전략문화의 주요 연구자들이 내린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스나이더는 전략문화를 “개념들의 총체, 조건부 감정적 반응 및 민족적 전략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시나 모방을 통해서 습득하고 핵전략과 관련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습관적인 행동 양식들”로 정의하고 있다(1997).³⁴⁾ 스나이더 이어 부스(Booth)는 “한 국가의 전통, 가치, 태도, 행동 패턴과 습관, 상징, 성취, 그리고 무력의 위협 혹은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특별한 방법들”이라고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정의하였다(1990).³⁵⁾ 부스는 행동양식과 습관에 대해서는 스나이더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민족적 전략 공동체’ 대신 일반적인 의미의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핵전략에서 뿐만 아니라 무력과 위협의 사용까지 논의의 초점을 확장시켰다. 무엇보다도 부스의 정의에서 새로운 점은 ‘상징’이라는 개념을 전략문화의 구성요소로서 도입한 것이다. 부스는 이후 전략 문화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전략 문화는 힘의 사용에 대한 독특하고 지속적인 일련의 믿음, 가치, 습관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정학적 환경, 역사적·정치적 문화와 같은 근본적인 요소들에 뿌리박고 있다”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1999). 한편 존스턴은 상징을 보다 협의된 개념으로 보고 “장기간 지속되는 전략적 선호들을 확립하는데 작용하는(논증, 구조, 언어, 추론, 은유 등) 상징들의 통합체계”라고 정의하였다(1995).³⁶⁾ 존스턴은 상징이라는 개념을 정의의 중심에 두어 설

32) Jack Snyder,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Nuclear Options,” (Santa Monia: Rand Corporation Report R-2154-AF, September, 1977), pp.28-29.

33) Ibid., p.6.

34) Ibid., p.8.

35) Ken Booth,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ffirmed,” in C.G. Jacobsen(ed.) *Strategic Power: USA/USS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p.121-128.

36) Alastair Iain Johnston, op.cit.(1995b), p.36.

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형성된 상징과 기호체계들의 흐름이 공유되고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 이것이 전략문화로서 반영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략문화는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다. “각 국가가 당면한 안보 상황과 관련해 정책적 판단(특히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해당국가 고유의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³⁷⁾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판단은 국가의 포괄적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포괄적 전략은 국가의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수단으로서 이는 단지 군사적 힘의 사용만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수단 등을 포괄한다. 전략문화는 국가의 포괄적 전략의 결정요소로서 군사적이며 물질적 전략과 달리 인식환경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포괄적 전략은 전략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문화적 구성체로서 어떻게 국가의 리더들이 문화적, 역사적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가를 반영한다.³⁸⁾

각 국가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특별한 지리적 요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안보 공동체에 의해 전략적 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문화요소로 구성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꾸준히 전승되는 개념과 태도, 전통 및 행위 등 다양하고 중첩되는 요소들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전략문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특정 사회의 전략적 전통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략문화라고 담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나 과거 어느 한 시기에만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뿐리 깊은 역사적 원천으로부터 나온 전략의 행위자(정책 결정자)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이어야 하겠다.

이러한 전략문화 이론은 기존의 접근방법에 문화적 접근방법을 더하여 기존의 이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 국가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고 설명이 가능하게 해 준다.

37) 황일도, 앞의 논문, p.30.

38) 조화성, “북한의 전략문화와 핵 협상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p.151.

2) 전략문화 구성요소: 역사적 경험, 정체성, 규범, 상징, 신념체계

한 국가의 전략문화를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략문화가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전략문화이론으로 북한의 전략문화를 해석해 내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준다. 앞서 살펴본 전략문화 이론의 개념과 이론화 과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전략문화의 주요 구성요소로 역사적 경험과 그로부터 형성된 정체성, 그리고 제도화된 규범, 상징과 신념체계로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전략문화에 있어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와 경험은 전략문화의 진화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국제 관계 이론은 국가를 분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약소국에서 강대국, 식민에서 탈식민, 그리고 전근대, 근대, 탈근대 등을 망라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국가가 다양한 물질적·이념적 자원을 가지고서 다른 전략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독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기한다. 신생국가에게는 민족국가 형성의 어려움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전략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오래된 국가는, 그들의 존재의 장구함이 강대국과 문명의 흥망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게 만들고 그에 맞는 정책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³⁹⁾

위 글은 정책결정의 선호도에 무엇보다도 역사적 경험이라는 핵심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말해줄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은 살아가는 방식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는 특정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두 번째 전략문화에서 특정 집단이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바로 특정 역사적 경험에 의해 축적된 문화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문화는 특별한 생활양식을 뜻하며 이

39) John Baylis · James J. Wirtz · Colin S. Gray, 『국제정치와 전략』, 김일수 외 옮김, (서울: 한티미디어, 2016), pp.112-113.

런 양식은 구체적인 행태들을 통해 표현되며 비교정치 분석에서 문화는 의미와 정체성 체계⁴⁰⁾로 규정한다고 한다. 노스럽(Northrup)은 정체성을 “다양한 차원에서의 자기를 정의하는 의식(a sense of self-definition at multiple levels)”이라 규정하고 정체성은 “자신의 의미, 예측가능성, 목적에 대한 의식을 확립, 유지, 보호하려는 인간의 경향”이라고 보고 있다.⁴¹⁾

정체성이란 한 마디로 ‘나는 누구인가’로 대표되는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사회학자들은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며 특히 사회적 관계와 그 속에서의 자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연속성, 독자성, 불변성,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나 느낌 등 개인의 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후자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개인이 남들과 다른 고유한 존재이며 타인과 구별해주는 독특함을 내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⁴²⁾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결국 정체성이란 인간이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구분하고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느낌이자, 이러한 자아를 형성하고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문화에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합리성과 이성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군사적 행동과 정책결정자들의 전략적 성향들도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과 같은 고유의 관념적인 요소를 통해서는 예측 가능한 일정한 패턴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략문화 이론이 가지는 문화라는 특성에서 오는 경로의존성, 즉 지속성이라는 중요한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걸쳐 축적된 역사적·문화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이라는 인식의 틀은 해당 문화권에 상당한 크기의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거나 정책결정 그룹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40) 신정현, 『비교정치론』 (서울: 법문사, 2000), p.188.

41) T. A. Northrup, “The Dynamic of Identity in Personal and Social Conflict,” in L. Kriesberg(eds.), *Intractable Conflicts and their Transformation*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89), p.63. 조윤영, 앞의 논문, p.55에서 재인용.

42)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10-12 (통일연구원, 2010), pp.78-79.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그렇다면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집단적 수준의 국가 정체성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정체성은 개인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타인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 개인만의 독특함이라는 특징에서 가변성이 크고 지속성이 짧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정체성은 ‘한 집합체의 성원들 간의 상호적 인식과 그들의 자기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가변성과 상황적 측면은 작은 대신 지속성과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⁴³⁾ 그런데 북한 주민의 정체성은 북한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북한사회의 폐쇄적인 특성은 개별 행위보다 집단주의적 행태를 보여 왔음을 생각해 볼 때 개인정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집단정체성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국가적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에서 설명할 제도화된 규범과도 연관이 있게 된다.

북한사회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집단주의 원리로 주민들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즉,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개인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집단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익히게 되며, 이로써 자율적, 능동적인 개성 있는 자아를 형성하기보다는 집단에 매몰된 수동적이고 획일화되고 전형화 된 자아를 형성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⁴⁴⁾

세 번째 구성요소로는 경험된 역사적 사건들과 이로 인해 형성된 인식적 공감대가 제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규범이다.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략문화 연구는 체제 구성원들의 인식적 공감대가 당위적 행동양식인 규범으로 구현되는데 주목한다. 그리고 규범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양산하는 중요한 논리적 기재로 작동한다.⁴⁵⁾

북한의 규범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바로 북한의 규범이 ‘주체사상’이라는 통치 이념으로 체계화되었다는

43) 조정아 외, 앞의 논문, pp.79-80.

44) 조정아 외, 앞의 논문, p.81.

45) 손효종, “북한 전략문화와 핵개발의 전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6), p.54.

점이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이 주체사상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여 통치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단결과 조화를 위해 체제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항상 동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었고, 이 규범은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틀을 제시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북한이라는 폐쇄적 사회에 대한 합의적 구속력을 갖게 한다.

다음 네 번째 구성요소는 상징체계로서 상징의 주요 매개물로 역할을 하는 언어와 이미지, 사물의 형태를 포함한다. 존스턴은 전략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징체계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고, 앞서 1장의 연구방법에서 언급했지만 실제로 그는 중국의 전략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과거 중국의 7대 고전병서인 무경칠서의 내용들 안에 들어있는 주요 어휘와 문장들을 분석하여 이것이 중국식 정책결정에 특정한 규칙성을 형성했음을 주장했다.⁴⁶⁾ 상징체계는 역사적 기반에 기인한 공유된 정보와 전략적 환경에 따른 특정 전략적 선택을 하게 하는 조작적 수준을 담고 있고, 이러한 상징체계는 규범이 담고 있는 내용을 겉으로 표현하여 이를 대중에게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규범적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정치적 구호와 선전 문구에 특정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중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어 공통된 생각과 신념을 갖게 하는 상징이 가지는 매개체적 역할을 잘 활용해 왔던 것이다.

상징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인식된 사물의 형태로도 문화적 기능을 한다. 그 예로 에스토니아에서 2000년 후반 일어난 정치적 불안과 사이버 공격을 들 수 있다. 이 혼란 사태는 에스토니아가 소비에트 전쟁기념관을 수도 탈린에서 군공동묘지로 옮기려고 결정한 것에 의해 촉발되었다.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인종적 러시아계 사람들에게는 그 동안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역사적 희생과 관련된 상징적 가치를 가지지만, 대조적으로 에스토니아에게는 그것이 잊고 싶은 과거인 점령의 상징일 뿐이다.⁴⁷⁾

46) Alastair Iain Johnston, op.cit.(1995b), pp.156-170.

전략문화의 마지막 구성요소로서 신념인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 규범체계와 상징이라는 4가지 주요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엘리트들에게 공통으로 형성된 강한 신념체계를 포괄하여 의미한다. 전략문화에 대해 보다 세련된 접근을 한 롱허스트는 실제 1~3세대 전략문화 연구자들의 언급과는 별도로 이들이 제시한 속성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요소들을 ‘신념’이라는 단어로 합하여 정의⁴⁸⁾내리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각각의 구성요소들로 전략문화의 이론이 가지는 유용성을 가장 잘 살려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라는 경험과 6·25전쟁을 통해 형성된 북한 주요 엘리트들의 관념적 체계, 이로부터 그들에게 생겨난 외부에 대한 위협인식은 특정 안보 정체성을 만들었고, 주요 텍스트(언어)와 이미지, 사물을 통해 그들의 규범을 전승하여 권력의 승계를 정당화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북한 체제를 유지해 온 그들만의 강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어 결국은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전략문화가 정책기조의 변경과 같은 낮은 수준의 변화와는 차별화되는 고유의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전략문화의 한계 및 보완

전략문화 이론을 통해 특정국가의 안보전략과 정책적 성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적지 않은 성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이론은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이론적 틀과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 전략문화라는 이론적 분석틀로써 한 국가의 전체 역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략문화로 단정 짓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북한의 모든 대·내외적 행태가 이러한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47) John Baylis · James J. Wirtz · Colin S. Gray, 앞의 책, pp.113-114.

48) 로렌스 손드하우스 지음, 이내주 옮김, 앞의 책, p.229.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기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문맥(context)을 형성하는 것일 뿐, 높은 수준의 인과성 (causality)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의 중점은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전략문화라는 변수를 통해 바라보기 위함이지 북한 전체의 전략문화에 대해 포괄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균질화하거나 과잉 일반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략문화 이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분석수준과 시기의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군사작전에도 전술적 수준, 작전적 수준, 전략적 수준이 있듯이 군사작전이란 큰 단위 안에서도 각각의 수준별로 고려하는 요소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행위자들에게 작동하는 인식의 정도와 범위가 모두 다를 수 있다. 또한 군대의 전략문화와 기업의 전략문화, 그리고 군 안에서도 육군의 조직, 공군의 조직, 해군의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전략문화가 있기 때문에 분석의 수준을 어떤 범위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수준의 범위는 북한 핵개발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군사적 수준을 넘어 국가전략 및 정책적 수준으로 정한다.

분석 시기는 제1차 북핵위기에서 제3차 북핵위기의 기간 동안 북한이 핵개발에 있어 어떤 대·내외적 전략적 환경 인식을 통해 정책적 선택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 형성단계를 구체화하고, 그러한 인식의 틀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에 대한 분석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시간적 범위로 정한다. 즉, 핵개발과 관련된 주요한 시기를 나누고, 해당 시기에 나타난 미국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을 통해 전략 문화적 속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 3 장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과정과 중심패러다임

제 1 절 북한의 역사적 경험과 안보 정체성 형성

북한의 전략문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략문화 이론은 한 국가의 통치자와 지도부와 같은 정치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체계와 인식 성향(오랜 문화적 축적을 통해 형성된)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안보정책의 우선순위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한 국가에서 공유된 신념이나 인식 성향은 바로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각 국가마다 공유된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이에 따라 구성된 신념체계와 인식 성향의 차이가 유사한 안보환경에 처한 국가들임에도 각 나라들이 선호하는 정책적 선택이 다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각 국가들마다 이러한 정책적 선호도의 차이는 각기 다른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그 국가만의 고유한 안보 정체성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주요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북한의 체제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떠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였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규범체계를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규범체계가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인 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과정을 알게 됨으로서 북한의 전략문화를 형성하게 된 기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얻은 경험은 한 국가의 주요 안보정책 결정자들에게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대외 정책기조의 특성과 체제정향을 포함한 공통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건들과 경험들이 국가의 집단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 중 가장 지배적이고

압도적인 사건들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내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북한 전략문화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사적 경험으로 항일무장투쟁과 6·25전쟁을 사례로 제시한다.

1) 항일무장투쟁과 ‘김일성 통치의 정통성’, ‘저항·폭력의 당위성’ 형성

북한의 체제 수립 전후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역사적 경험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살펴보아야한다. 이 경험을 통해 북한은 당시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되었던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생겨난 반일감정과 민족주의 분위기에 고취되어 있었던 당시 대중들에게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험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애국주의자, 항일 투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 대한 정당성과 통치에 대한 태생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항일유격대식 사회주의 혁명을 그들의 전통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저항과 폭력에 대한 당위적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이 북한의 전략문화에 끼친 주요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은 북한 체제 수립 초기에 김일성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그의 통치에 정당성과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이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 초기 소련에 의해서다. 소련은 갑산파(=빨치산파)의 항일무장투쟁을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활용하였다. 당시 소련지도층은 북한에 친소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4년 간 소련에서 정치교육과 지도,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 김일성을 신임하였고, 자신들이 지명한 지도자를 파견하여 북한을 위성국화 하여 지배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이었고, 우리 민족이 억압과 탄압받던 시기에 일본과 투쟁한 것을 선전 용으로 삼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추대된 명분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소련은 북한정권과 항일무장투쟁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고, 마치 김일

성이 북한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북한정권 설립 초기 4대 파벌(갑산파,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이 각축을 벌이는 연립정권하에서 소련이 김일성을 옹립하기 위한 전략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활용한 것이다.⁴⁹⁾

소련군정의 강력한 지지로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본인 스스로도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항일 투쟁의 이미지를 각종 연설과 저작, 담화 등을 통해 강조해왔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날 일제의 착취와 탄압이 극도에 이르고 조국의 하늘에 비운이 뒤덮였던 암담한 시기에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조국을 광복하려는 일념으로 감옥도 단두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강도 일제와 굴함 없이 싸워 민족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으며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고 있습니다.⁵⁰⁾

김일성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거론 하는 것이 바로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북한이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김일성의 항일 활동 업적을 부각시키는 작업과 병행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공통의 정서영역을 만들어냄으로써 1960년대 중후반부터 강조된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충성을 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폭력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였던 항일 투쟁의 방식은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저항과 폭력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했다. 김일성이 1986년 5월 31일 고급 당 학교 창립 40돌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강의한 내용으로 편찬한 『조

49) 서재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6(11), pp.120-134.

50) 김일성, “인민군대는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 (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1949년 7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206. 서재진, 위의 책, p.236에서 재인용.

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에는 조선로동당이 건설되어 온 역사적 경험과 당 사업 전반에 대한 위대함과 당 활동의 당위성을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중 1장에 해당하는 「당 창건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당 창건을 위한 오랜 투쟁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⁵¹⁾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전쟁인 동시에 숭고한 공산주의적 이념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었으며 당 창건을 위한 영광스런 투쟁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당 창건을 위한 새 국면을 열었으며, 공산주의 대열의 통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고 당 창건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고⁵²⁾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당 조직을 이끌어 갈 공산주의 핵심을 길러낼 수 있었고, 이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되어졌으며, 우수한 아들, 딸들을 항일무장대오에 받아들여 원수들과의 피어린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시킴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소유한 백절 불굴의 혁명투사로,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 핵심으로 키워냈음을⁵³⁾ 강조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러한 항일운동에서의 경험은 국방·군사 분야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자위적인 억제력 확보에 주력하는 북한의 안보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⁵⁴⁾ 유격대 자체가 폭력적 투쟁에 근거한 전투활동을 의미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직된 유격대인 88특별여단(동북항일연군)이 일본제국주의의 야수적 통치 밑에서도 직접 총칼을 손에 잡고 일어나 민족을 해방하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통이 북한 인민군으로 계속하여 명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은 북한 체제 수립과 김일성 중심의 권력 질서를 구축하는데 정통성을 부여하고, 유격대식의 저항·폭력의 당위성의 강조로

51) 편집부 엮음, 『주체사상 연구』 태백총서, 제12권, (서울: 태백, 1989), p.97.

52) 위의 책, p.97.

53) 위의 책, p.99.

54) 손효종, 앞의 논문, p.64.

이어지며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에 있어 신념체계와 인식의 바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항일운동에서의 경험은 당시 대두되었던 민족주의의 인식과 해방 이후 사회주의 노선이 접목되면서⁵⁵⁾ 1960년대 이후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하나의 규범으로 체계화된 주체사상을 형성한 배경이 되었다.

2) 6·25전쟁과 ‘대미 적대의식’, ‘포위 맨텔러티(Siege Mentality)’ 형성

6·25전쟁의 경험은 북한의 전략문화의 형성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기이다.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단행했던 북한의 저항적인 성향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 된 이후 소련과 미군에 의한 한반도 분할 점령 시기를 거치며 미국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김일성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적화통일과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민에 호소하며 6·25전쟁을 일으켰다. 북한이 정권을 수립하고 그들의 무력동원의 핵심인 인민군이 투입되어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의 실제 운용을 해 본 경험이었다. 물론 전쟁 초기 한국군에 비해 수적으로 절대 우세였던 병력과 현대적 무기로 질적으로 월등했던 무장력으로 북한군은 승승장구하였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미군을 포함한 UN군의 한반도 진출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된다.

특히 북한군은 미 공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 폭탄 63만 5,000톤과 네이팜탄 3만 2,557톤을 쏟아 부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된 폭탄 보다도 많은 양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 때 미군의 이러한 폭격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⁵⁶⁾

이러한 한국 전쟁에서의 참화는 북한 스스로 세계 최강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에 의해 언제든 침략당할 수 있다는 위협인식이 내부에서

55) 손효종, 앞의 논문, p.63.

56) 유재광,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핵 및 미사일 위협 원인 고찰: 북한의 ‘전략 문화’ 및 ‘체제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김태진 외, 『북한과 국제정치』(서울: 늘품플러스, 2018), pp.231-232.

싹트기 시작하여 제국주의로부터 그들이 영구히 포위되어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그들의 승리에 가장 큰 결림돌이자 전 국토를 초토화한 주범으로 인식된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 즉, 반미사상이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전쟁이 종료되었음에도 북한에게 가장 위협세력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 공식화되자 북한은 미군이 존재하는 한 자신들은 영원히 포위된 지리적·전략적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상정했다. 즉,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항상 세계 최강의 적국의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제국주의에 영구적으로 포위되어 있다는 신념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⁵⁷⁾ 이러한 신념은 북한에게 외국의 공격, 특히 미국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변의 적대국에 의한 전략적 환경이 만들어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응 방법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게끔 하였다.

1965년 10월 1일 조선노동당 창당 20주년을 맞아 김일성은 미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연히 선언한다.

우리 당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며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에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며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와 아세아의 전 지역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아세아의 모든 반제 혁명역량과 더욱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⁵⁸⁾

사실 이러한 북한의 반미사상은 전쟁 이전 이미 많은 북한주민에게 교화되고 내면화되어 있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은 ‘미국이 제국주의의 괴수로서 남조선을 무단 강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군에 의한 군

57) 유재광, 앞의 책, p.232.

58) 김일성, “조선노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 『북한연구 자료집』 제6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p.765.

정실시와 영어의 공용어 선택, 점령군에 대한 반항조선인의 엄벌 등을 빨 표한 맥아더 장군의 포고령을 남한을 식민지 노예화하려는 노골적인 정책 이라 간주했다. 그리고 남조선 괴뢰정부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식 민지 예속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도구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 말하는 한국전쟁은 바로 이러한 남조선 괴뢰를 몰아내고 나아가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괴뢰정권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미제국주의 자들의 도구였다. 괴뢰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 하에 민족분열과 동족 상잔의 내란도발을 준비하여 조선인민의 온갖 민주주의적, 애국적 역량을 말살하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하는 반인민적, 반동적 매국정권이다.⁵⁹⁾

북한의 국정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조선통사』에서 북한의 역사를 위와 같이 가르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맥락의 역사적 인식이 북한 주민들 의 신념으로 자리 잡아 국가관이나 정체성 형성에 있어 그들만의 하나의 공유된 인식체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쟁 이전에 내면화된 반미사상과 전쟁 중에 북한주민이 직접 체험한 역사적 경험은 이미 내면화되어 있던 사상을 검증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전시 또는 전후의 정치·사상사업의 중요내용으로 반미 적대감 선전선동으로 인해 이들이 서로 변증법적 지양을 거쳐 반미 적대심은 더욱 고양 되었다. 이러한 반미 적대감 확산의 선선선동 사업은 전후복구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북한민중을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건설 혁명의 주체자로 성장시키고, 당과 정권을 중심으로 전체 인민을 단결시키는 정권안정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⁰⁾

북한의 공식적인 전쟁성격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전사』 25권은 한국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9)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통사 (하)』(오월, 1989), p.354.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91), p.195에서 재인용.

60)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社会의 구조적 변화』(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91), p.195.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전쟁은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인민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었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또한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연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었으며 침략전쟁을 확대하여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쳐부시고 사회주의 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었다.⁶¹⁾

위 서술에는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전쟁의 성격을 보여준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하수인이자 제국주의 앞잡이에 불과한 괴뢰에 불과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반민족적·반민중적 정권이었다. 이러한 기본인식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려고 일어선 사람들을 어떻게 침략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강변한 김일성의 1950년 9월 11일 라디오 연설⁶²⁾에서도 보여지는데 이것은 설사 북한이 먼저 남한을 전면 공격하였다 할지라도 북한은 침략자라고 불릴 수 없는 면죄부를 가진다는 식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정통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남한정권이 무력 침공한 한국전쟁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북한정권과 조선의 전민중이 연합하여 남한 괴뢰정권을 무너뜨리는 대업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역사인식이다. 나아가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이행을 위해 이러한 그들의 보편적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행동을 방해함으로써 중국혁명을 억제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북한에게 그 어떤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도 침략적이고, 반혁명적이며 반역사적인 민족의 원수라는 논리가 바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역사적 인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⁶³⁾

61)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5. 손호철 외, 위의 책, p.162에서 재인용.

62) 서대수,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107.

63) 손호철 외, 앞의 책, pp.162-163.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은 스스로 한국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의식을 굳건히 가지고 하나로 뭉쳐 싸운다면 아무리 강대한 무력을 가진 제국주의 침략자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이 보여 주었다.

둘째, 제국주의 착취와 압박으로부터의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것으로 결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 가능하고 또 유지될 수 있다.

셋째,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군사적·기술적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며 그들의 사상의식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여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깨닫고 하나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⁶⁴⁾

위의 주장에서 강조되는 키워드로 주체의식, 반제반미사상, 사상의식과 투쟁의 강조, 혁명적 군중노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더욱 촉진·강화되어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의 기초가 되는 북한의 안보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북한의 규범체계: 주체사상의 분석

1) 북한의 통치이념 ‘주체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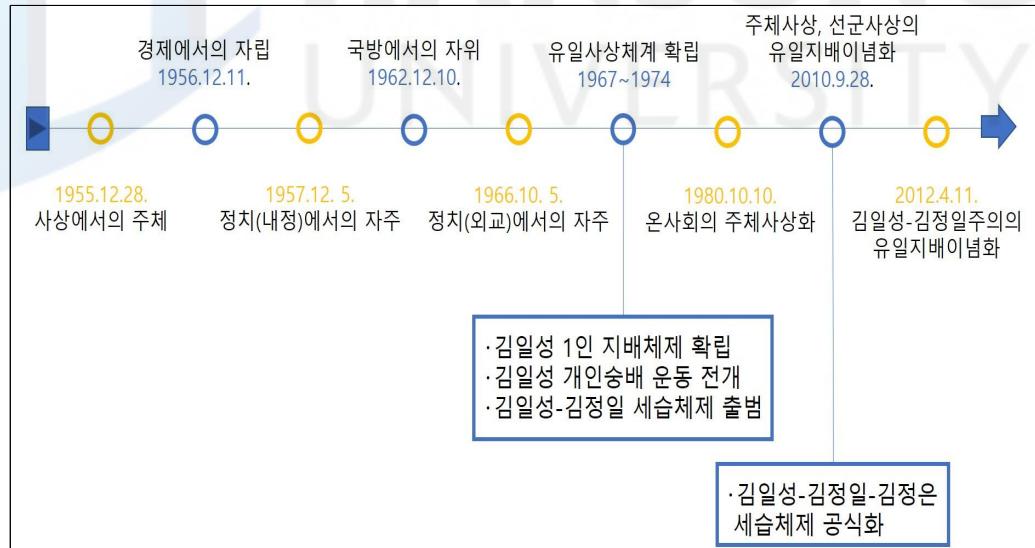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식 통치이념으로 하는 전체주의 국가이자 신정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기존 공산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으로 가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그들의 통치이념을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하여 주체사상은 하나의 종교화된 북한체제의 종교적 교리처럼 되어 버렸다.

6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당력사1: 1979년판』(서울: 돌베개, 1989), pp.396-397. 손호철 외, 앞의 책, p.163에서 재인용.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할 필요성에 의해 김일성 사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만들어 낸 이념체계로서 주체사상의 이념체계 내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논리적인 억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체사상이 이처럼 정교한 논리체계의 이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의 행위에 방향성을 주고 북한 사회 전체에 한계를 설정하여 ‘벗어날 수 없는 틀’로 북한을 집단적으로 묶고 있다는 사실이다.⁶⁵⁾

북한은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공식적으로 자체이념을 세워 나갈 것을 선언하고, 각 연구기관에 주체사상의 체계화 작업을 지시했으며, 그 결과물로 철학연구소에서 1970년에 완성한 「철학사전」이 편찬되었다. 이후 1973년에 새 철학교과서를 집필하고, 1974년는 “당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전인민이 휴대하고 다니도록 하였다. 1980년 10월에는 로동당 제6차 전당

[그림 3-1]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출처: 통일교육원, 『2019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pp.26–27을 참고하여 재작성.

65) 이상우, 『북한정치 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 (서울: 오름, 2017), p.181.

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 된다”로 고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치하는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굳혔다.⁶⁶⁾ 이후 김정일이 김일성 생일 70주년을 맞아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체계화된 주체사상 교재를 만들었으며, 1985년에는 10권으로 구성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하여 주체사상의 체계화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2)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구성과 분석

김정일이 1982년 3월 31일에 발표한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완성과정의 합법칙성을 밝혔다고 평가한다. 또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철학적 세계관을 정연하게 정립하였으며 사회역사원리를 전면적으로 밝혀 이를 과학적으로 정립했음을 물론,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체계화하여 혁명실천 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처럼 주체사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고 평가 받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김정일에게 주체사상의 탁월한 대가라는 명성을 부여해 김일성의 사상을 강화하고 김일성의 뒤를 이어 자신이 유일통치자로서의 권력승계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총 73쪽 분량에 「주체사상의 창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로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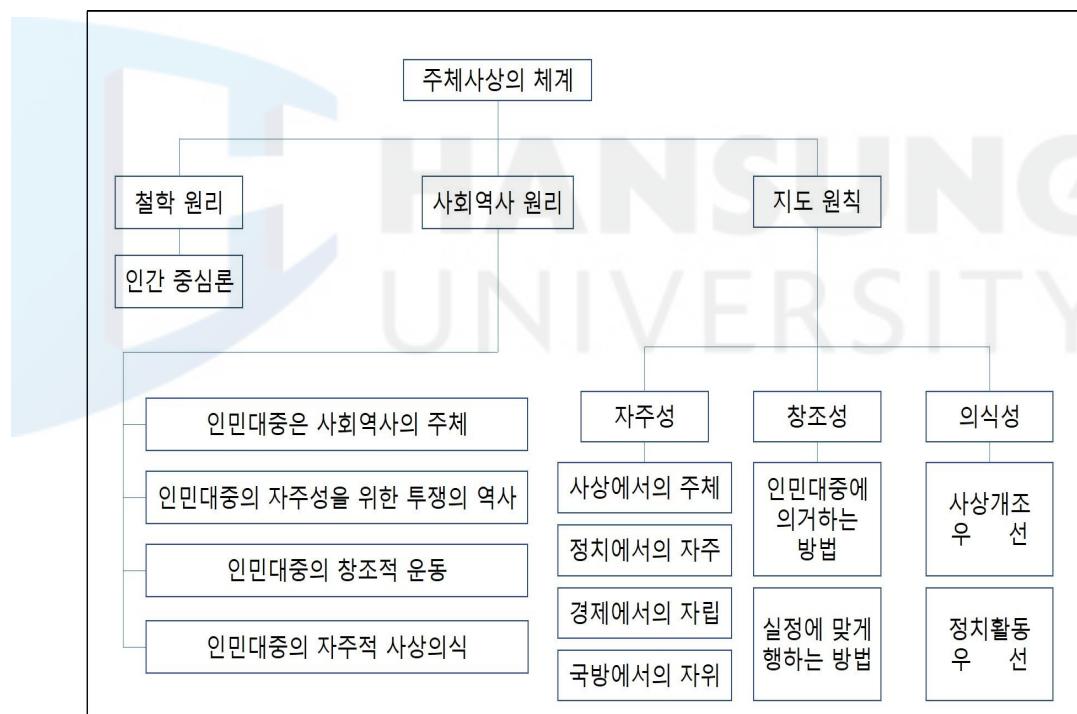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서는 인간 중심론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가치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⁶⁷⁾ 그런데 이 속성은 원래 사회가 가지는 것인데 사회적 존재이자 그 구성원인 인간

66) 이상우, 앞의 책, p.184.

67) 위의 책, p.186.

이 사회로부터 그 속성을 부여받는다고 주체사상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결국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인간 중심주의는 개인은 자유주의적 인간관으로서 독립된 자기 완성적 존재가 아니라 집단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만 존재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개개인의 존재가치는 전체 생명체를 위해 본인이 부여받은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며 이렇게 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때의 개인과 전체의 관계를 자유라 한다.⁶⁸⁾ 즉 자유는 전체와 공존할 수 있는 자격이라 해석하는 것이며, 집단으로서의 인간을 주인, 주역으로 본다는 생각이다. 종합해보면 주체사상에서의 사상적 기초는 바로 사회유기체론을 밑바탕에 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⁶⁹⁾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2] 주체사상의 체계



*출처: 편집부 엮음, 『주체사상 연구』 태백총서, 제12권, (서울: 태백, 1989), p.28을 참고하여 재작성.

68) 이상우, 앞의 책, p.185.

69) 위의 책, pp.185-186.

주체사상에서 ‘사회역사적 원리’는 네 가지 핵심내용으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는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바로 역사의 본질이며, 이 때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고 한다.⁷⁰⁾ 사회역사적 원리는 철학적 원리와 비슷하게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사회역사적 원리의 차별성은 수령의 옳은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결국 통치자의 역할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규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장인 ‘지도적 원칙’에서는 주체사상은 완비된 지도적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은 견지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역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그들의 주동적인 활동을 높이기 위한 방도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지도적 원칙은 자주적 입장의 견지, 창조적 방법을 구현,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줘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개념으로 세분화 되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지도 원칙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 부분의 핵심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5장은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말하면서 앞서 제시한 여러 개념들과 원리, 원칙을 재정리하는 결론 부분이다. 주목할 부분은 ‘역사적 의의’라는 제목을 통해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권력 정당성을 옹호하고, 규범의 합리적 기반이 역사적 경험에 있음을 보여준다.

3)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주요 규범적 메시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토대로 주체사상의 체계를 분석해 보면 결국 주요 규범적 메시지는 ‘사회역사 원리’와 ‘지도원칙’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철학적 원리에 해당하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세 가지 특성이 ‘자주적

70) 편집부 엮음, 앞의 책, pp.33-36.

입장의 견지’, ‘창조적 입장의 구현’, ‘사상을 틀어줘야 한다’는 지도적 원칙으로 파생되어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창조성과 의식성은 자주성을 구현함에 있어서의 방법적 측면과 사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신적 무장과 관점 및 태도(자기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체사상의 규범적 측면에서 핵심이자 목적은 자주성 구현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나오는 이러한 ‘자주성’을 강조하는 주요 문구이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국제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만큼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역시 국제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⁷¹⁾ –주체사상 사회역사 원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입니다. (중략)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⁷²⁾ –주체사상 지도적 원칙 “사상에서의 주체”에서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됩니다. 정치에서 남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 수 없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됩니다.⁷³⁾ –주체사상 지도적 원칙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으며.....(중략)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입니다. (중략)..... 경제건설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야 합니다.⁷⁴⁾ –주체사상 지도적 원칙 “경제에서의 자립”에서

71) 편집부 엮음, 앞의 책, p.187.

72) 위의 책, p.196.

73) 위의 책, p.200.

74) 위의 책, pp.201-202.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수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입니다. (중략)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져야 합니다.⁷⁵⁾ –주체사상 지도적 원칙 “국방에서의 자위”에서

위에서 살펴본 주요 메시지들은 북한이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존과 행동, 이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선호할 것임을 보여준다. 자주성을 강조하는 언어적 특성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최소화하며 스스로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면도 있지만 이런 경향이 강하게 되면 내가 아닌 타인 또는 외부 세계에 대해 점점 배격하거나 배척하는 태도까지 나타나게 된다.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로 보았을 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렇게 ‘자주성’을 하나의 이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내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이익들은 희생할 수도 있고, 다른 차원의 위협들은 감수할 수도 있다는 정책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주체사상의 언어적 상징체계에서 읽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 규범 메시지는 바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계급주의와 봉건주의를 결합시킨 절대적 수령론’이다. 이것은 철학적 원리의 핵심인 인간 중심론과 사회역사 원리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주체사상에서 의미하는 인간 중심론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개념이고 이에 따라 인간 개인을 집단의 부분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개념임을 앞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주요 문구를 보면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역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중

75) 편집부 엮음, 앞의 책, pp.204-205.

략) 공산주의 운동은 그 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것만큼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 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입니다. (중략)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⁷⁶⁾

결국 위 내용을 종합하면 수령의 뜻을 따르는 당이 바른 지도를 할 수 있고, 인민대중이 당으로부터 옳은 지도를 받으면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체사상에서 의미하는 수령론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수령의 통치이념이자 가르침인 주체사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적 연계성이 형성 되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북한에 유리하지 않은 국제정세를 이용해 일종의 자주적인 안보론의 성격으로 주체사상을 만들고, 이를 스스로에 대한 권력의 영구화와 대를 이은 세습화를 시도하는데 이용했다. 김일성의 지도사상만이 북한의 유일한 외교·안보·경제의 지도사상이 되어야 하며, 4가지의 자주성의 원칙을 내세우며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일체의 정치적 위협이 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에 대한 외부적 위협에 항상 강력한 군사력으로 투쟁하여 이를 극복해야 함을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외세에 의해 북한이 끊임없이 외침과 항복이라 는 굴욕의 수세기에 걸쳐 겪어왔으며 이러한 굴욕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북한의 위대성에 대한 분명한 결의의 표현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외세와의 갈등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기보다 정치적 문제들의 직접적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다.⁷⁷⁾

해리슨의 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사상은 국제질서에서 기본적으로 영원한 친구는 없으며 결국 정치, 경제영역과 군사적 부분에서도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 자주성과 자강의 확립은 북한의 생존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체계는 이후 북한의 군사력 운용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76) 편집부 역음, 앞의 책, pp.183-184.

77)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김태진 외, 앞의 책, p.234에서 재인용.

으며, 기본적으로 타국과의 모든 외교적 분야에서도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북한 스스로 군비증강과 국력 강화만이 자신들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며, 이러한 군사적 능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북한의 안정은 증가된다는 신념체계를 형성시켰다.⁷⁸⁾

최근 주체사상은 김정일이 1인 전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선군정치’(2009년 9월 28일 제9차 개정헌법 <사회주의 헌법>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공식적으로 명문화)와 김정은의 ‘김일성-김정일주의’(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 그리고 김정은이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 제시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 보조적 지침과 교조화 수단을 통해 강력한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언어적 상징체계로서 여러 행동원칙과 지침들이 규범화되어 전략문화로 확립되었고, 이것이 신념화되어 개인의 생활과 사상, 경제활동과 산업영역 등 전반적인 사회영역으로 확산되었다.



78) 김태진 외, 앞의 책, pp.233-234.

제 3 절 북한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

1) 존스턴의 중심 패러다임

존스턴은 전략문화를 규정하면서 ‘상징들의 통합체계’라고 정리하며 상징이라는 개념을 정의의 중심에 두어 설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형성된 상징과 기호체계들의 흐름이 공유되고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 이것이 전략문화로서 반영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위협 인식과 신념을 구현하는 세 가지 주요한 가정으로 구성된 ‘중심적 패러다임(Central Paradigm)’을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전략문화가 형성되는 주요 환경적인 요인은 가정한 것인데, 첫 번째는 갈등빈도(제1번 변수)이고 두 번째는 갈등의 제로섬(제2번 변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군사력 사용의 효용성(제3번 변수)이다. 존스턴은 이 3대 패러다임 축이 모두 상승 조건이 될 때 국가의 행동의 특성이 전략문화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존스턴의 경우 위 세 가지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중국의 전쟁추구 전략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적용은 그의 논문에서 중국의 전쟁추구 전략을 설명하려는데 그 유용성을 가지는 것이지 이 패러다임의 변수 성격을 모든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전쟁의 수행방식이나 전쟁추구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의 목적에 맞게 개념과 핵심 변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장의 제1절과 제2절에서 북한의 전략문화 형성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의 핵정책과 관련한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도록 하겠다.

2) 북한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

본장 제1절에서 북한의 역사적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북한 고유의 정

79) Alastair Iain Johnston, op.cit.(1995b), p.149.

체성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에서의 ‘김일성 통치의 정통성’, ‘저항·폭력의 당위성’ 형성과 6·25전쟁의 경험에서의 ‘대미 적대의식’, ‘포위 멘탈리티(Siege Mentality)’ 형성이 바로 그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이 수령으로서의 지위의 정당성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에서의 경험으로 민족주의적 정신을 강조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애국주의자, 항일 투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했다. 북한이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신화화하여 왜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6·25전쟁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북한의 제국주의에 대한 위협인식과 그로인해 침략 세력들이(특히 미국) 호시탐탐 약소국을 노리고 있고, 북한은 이러한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즉, 북한의 정체성은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제국주의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존재로서 이러한 폭압과 약탈에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과 자위적 무장력을 갖춰야 한다는 신념이 오랜 기간을 거쳐 내면화된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의 체계와 분석을 통하여 이것은 북한의 가장 구속력 있는 통치이념으로 종교적 교리처럼 규범화되어 주체사상에서 핵심단어인 ‘주체’와 ‘자주성’과 관련이 있는 반복적인 메시지들이 북한 사회 전반에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자주성이란 개인이 전체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는 것을 말하므로 집단주의에 구속된 ‘자주성’이란 특징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내정불간섭의 추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자위적 방위력을 갖춰야 하는 무력 중시 원칙으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주체사상에는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계급주의와 봉건주의를 결합시킨 절대적 수령론’을 강조함으로써 1인 지배체제를 추구하는 북한의 규범적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에 대한 세습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당위적 명제가 되어 대를 이은 독재 권력을 영구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북한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틀’이자 종교적 교리와 같은 통치이념이라 지칭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의 전략문화 중심 패러다임 형성에서 이 규범체계가 핵심 요소이자 키(key) 텍스트로서 타당성이 높은 이유이다.

특이한 것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위협인식과 정체성이 주체사상에서 그대로 주요 규범적 틀을 구성하고 있고,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한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 해당 국가가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그렇게 용인되는 행동의 틀인 규범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략문화 연구가 체제 구성원들의 인식적 공감대가 당위적 행동양식인 규범으로 구현되는데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전략문화를 분석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사건은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제정치 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이로 인한 북한의 주요 후견국들이(소련, 중국) 몰락한 경험이다. 주요 군사 원조국인 소련은 붕괴하였고, 새로 들어선 러시아와 중국은 1990년대 초 한국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은 국제적 고립감과 체제에 대한 극단적인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은 자국의 안보는 철저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성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은 기존의 북한이 추구한 정책적 흐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핵무기에 대한 집착, 즉 “핵통치에 대한 신념” 강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냉전이 종식되는 시점과 제1차 북핵위기가 시기적으로 비슷한 이유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의 획득과 실전배치로, 이를 통해 최소한의 체제생존과 정권 보장을 유지하겠다는 신념체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환경 변수들이 전략 문화의 구성요소들(역사적 경험, 정체성, 규범, 상징, 신념체계)과 연계되어 북한 전략문화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써 구성된다. 이 때 우선순위가 매겨진 전략적 선호들의 대형 묶음들이 중심 패러다임이라는 필터를 통해 현실정책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통하여 북한의 전략문화 중심 패러다임을 다음 [표 3-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 북한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

	중심 패러다임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식민통치와 6·25전쟁의 경험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p>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사상의 주요 규범적 메시지 (‘사회역사적 원리’와 ‘지도원칙’에서의 핵심 규범)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체와 자주성></p>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저항과 폭력의 당위성) · 국제적 고립감과 체제의 불안정성 · 무력 중시 원칙, 자위적 무장력에 대한 신념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p>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무장투쟁의 경험(김일성 통치의 정통성) · 주체사상에서 ‘절대적 수령론’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p>

*출처: 연구자 작성.

제 4 절 분석의 틀

제3절에서는 북한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을 추출해 보았다. 이런 중심 패러다임은 바로 외부환경의 변화와 영향에 따라 파생된 관념적 요소(전략문화의 원천에서 비롯된 가치체계 및 신념)들에 영향을 받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그들의 선택지에 놓인 전략적 선호도 또는 정책적 대안들이 현실정책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그 인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중심 패러다임이 곧바로 정책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지도부 또는 정책결정자들 인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지적 지도”가 역할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고의 틀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략 환경의 인식과 정책선택”이라는 정책결정의 사고과정에서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 인지적 지도는 북한의 전략문화 이자 하나의 ‘독립변수’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독립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느끼는 대·내외적 위협의 강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전략 환경이 ‘독립변수 1’이 되는 것이고, 전략문화의 중심 패러다임이 인식의 렌즈 역할을 함으로써 ‘독립변수 2’가 되며, 이것을 통해 북한이 정책적 선택(강압 or 유화)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분석의 틀로 제시한다.[그림 3-3]

결국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을 하면서 강압적인 정책선택이냐, 협상 타결로 가느냐 하는 것은 중심 패러다임이 정책선택에 미치는 관념적 기여도에 따라 달라졌다고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이러한 분석의 틀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모델이나 하나의 국제정치학적 시각의 분석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북한의 행동패턴에 대한 일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북한을 불합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국가라고 설불리 결론내린 것에 대한 난점을 극복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림 3-3] 분석의 틀: 중심 패러다임 +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메커니즘



중심 패러다임	
①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②	주체와 자주성
③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④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제 4 장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의 메커니즘의 형성

제 1 절 제1차 북핵위기(1991~2002)

1) 대·내외적 상황

미국은 1982년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진전을 위성으로 포착하고 있었다. 1989년에 들어와서 영변에 건설 중인 핵시설들이 핵무기 개발용 임이 명백해지고 핵무기 제조용 농축플루토늄 생산이 곧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은 1989년 2월 이 사실을 소련과 중국에 통보했고 5월에는 한국 정부에도 통보했다. 그해 9월에는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가 촬영한 영변 핵시설 전경이 세계 언론에 공개되었고,⁸⁰⁾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시작이었다. 그 이후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문제가 일단 봉합될 때까지 5년 동안 북한과 미국, 한국, IAEA 4자간의 협상과 강압, 위기조성이 반복하는 복잡한 전개가 시작되었다.

제1차 북핵위기 시 북미 간 가장 큰 쟁점사항은 IAEA의 대북한 핵사찰 문제였다. 미국은 프랑스 위성이 촬영한 영변 핵시설 공개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풀기 위해 1990년대 시작부터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촉구하였다. 모든 NPT 회원국은 가입 후 18개월 이내에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IAEA의 핵사찰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한 이후 5년이 되도록 이를 거부하고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북한 스스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80) 이용준,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반도 핵 게임의 종말』(서울: 한울아카데미, 2018), pp.53-54.

바로 이 부분이 북한 핵개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의심하는 지점이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에너지를 위한 평화적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고자 했다면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지연할 이유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NPT 가입 이후 안전조치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IAEA의 대북한 핵사찰은 북한에게 있어 그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핵개발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 시기에 모호성을 유지한 채 은밀한 핵개발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

북한은 이 시기 국제정세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도 김일성 사망에 따른 정치적 불안, 만성적인 경제난과 배급중단 및 집단의식 이완 가능성 등 급변하는 불안한 정세 속에 있었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한·소수교(1990년 9월)에 이어 소련이 해체되고(1991년 12월),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에는 우파 정권이 등장하였으며,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한국과 수교(1992년 8월)를 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시기였다.⁸¹⁾

당시 소련은 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북·소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이를 북한에 직접 알리기도 했으나 더 이상 관계개선은 되지 못했다. 당시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한에게 상당히 충격이었고,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가 한·소수교를 북한에 알리기 위해 평양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은 소련이 자신들을 배신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독자적 핵 개발 의지를 강하게 주장했다.⁸²⁾

북한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중국은 당시 적극적 경제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소련과 경제적 연대가 무너진 북한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중국 밖에 없었다. 그러나鄧小平은 개혁과 개방 노선을 선언한 후 대외개방 정책과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북한의 경제정책과 반대의 노선을 선택한 것이며, 당시 북한에게 유일한 이념적·경제적 우방인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81) 이용준, 앞의 책, 2018, p.55.

82) “[북미정상회담] ‘격동의 70년’ 북미, 오늘 ‘한반도 평화’ 위한 첫 걸음,” <천지일보>, 2018.6.12.

북한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

결국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무역이 마비되면서 북한의 경제적 고립과 극심한 타격을 야기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대북원조를 받고 있었는데 사회주의 연대의 역량이 위축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1990년 이후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매년 평균 10%가량 축소되고 있었고, 1993년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시인했고 김일성 역시 다음해 신년사에서 북한의 경제난을 토로하였다.⁸³⁾ 북한의 대외 무역거래의 감소는 결국 대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정상적인 배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북한 지도부에게 대중압박으로 작용하여 체제의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과다한 국방비의 지출에 따라 북한의 경제는 더욱 침체되었고, 이는 1990년대 중반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적 고립과 대내적 불안정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핵능력을 기반으로 강압전략을 시도하는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된다. 북한이 애초부터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차안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1990년대 초반 전략적 상황이 그들에게 핵무기 개발, 곧 ‘자위적 핵 억제력’이 외교적 강제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한 것은 분명했다.⁸⁴⁾

아래 표[4-1]은 제1차 북핵위기의 전개와 제네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1차 북핵위기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확인하고 제거하려는 IAEA와 미국, 한국과 이를 거부하려는 북한 간의 대립과 타협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크게 3가지 협상통로로 복잡하게 진행되어, 결국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에 의한 제네바합의로 봉합되었다.

83)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01), pp.297-298.

84) Don Oberdorfer, 이종길 옮김, 『두 개의 한국』(서울: 길산, 2003), p.374.

[표 4-1] 제네바 합의에 이르는 과정(1988~1994)

단계	IAEA : 북한	남한 : 북한	미국 : 북한
1 단계	북, IAEA에 안전조치협정조건으로 대북 핵불사용, 불위협 명시 요구 (1990.2)	7.7선언(1988.7) 남북 고위급 회담 (1~5차, 90.9~91.12)	참사관급 접촉(북경, 88.10~94.9) -미, IAEA 안전조치협정체결 -남북 대화 등 5개 항 요구 -북, 북미 관계 정상화 및 고위급 회담 요구
	IAEA이사회, 북 전면적 안전조치 협정체결 권고(1990.3.6)	남북한 UN동시가입(1991.10)	미북 고위 관리 접촉 (워싱턴, 1991.6.5.)
	북, 주한미군핵과 동시 사찰시 IAEA사찰 수용주장(1990.11.16) 북외무성, 협정서 명 및 사찰수락성명(1991.12.22)	남북기본합의서(12.13) 남한 내 핵부재 선언(12.18) 핵문제 협상을 위한 남북 실무자대표회담(1~3차, 12.26~31)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12.31)	부시, 해외전술핵무기 폐기 선언(1991.9.28.)
2 단계	핵안전조치 협정체결(92.1.30)	북, 안전조치협정 서명, 사찰수용 남,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합의(92.1.7)	
	북, IAEA에 최초보고서 제출(92.5.4) (북한의 신고내용: 플루토늄 1회, 80~90g 추출)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92.3.19)	미북 고위급 회담 (켄터-김용순, 92.1.22~29)
	IAEA 임시 핵사찰(6회, 92.5.5~9.26) (중대한 불일치 발견 3회 kg 단위)	남북 고위급 회담 중단(92.10.31) *연례군사훈련 실시 비난 *9차 회담 취소(92.12.21~23)	
3 단계	IAEA, 북한의 미신고시설 특별사찰 촉구(1993.2.9)	남,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북미 직접 협상제의(북, 93.3.29) 미북 고위급 접촉 합의(5.17~21)
	북, 특별사찰 거부(1993.2.24)	북, 준전시상태 선포(93.3.8) 북, 노동 1호 미사일 발사(5.29)	1단계 고위급 회담(6.2~11) *갈루치-강석주 *북, NPT탈퇴 잠정유보(6.11)
	NPT탈퇴선언(93.3.12) UN안보리 의장성명(4.8) UN안보리 결의안 825호(5.11) IAEA, 방북, 제한된 활동(8.31~9.4) IAEA 사무국장, 핵물질 전용 검증불가능 선언(12.3)	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제의(8.4) 북, 거부(8.9)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10월) 북, 핵통제공동위원회 중단(11.14)	2단계 고위급 회담(7.14~19) *북 원자로, 경수로 대체 논의 북미 핵사찰 합의(12.29)
	안전조치 유지를 위한 실무접촉(94.1.7~2.15)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 (1~5차, 94.3.3~19)	북미 합의 내용 공개(94.2.25)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사찰개시(3.3~12) *남북실무접촉, 3단계회담 재개
	IAEA이사회, 북핵문제 UN회부 결정(3.21) UN안보리 의장성명(3.31) 북, 원자로 가동중단, 폐연료봉 인출(4.10~6.15, 8000개)	북한대표 박영수, '서울 불바다' 발언(94.3.19)	카터방문(94.6.15~18) *카터-김일성 면담
	IAEA 대북 제재 결의안(6.10) 북, IAEA 탈퇴선언(6.13)	전군경계강화령,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결정(94.3.19) 김일성 사망(94.7.8) *남북정상회담 무산(7.25~27 예정)	3단계 고위급 1차회담 (94.7.8~10, 8.5~12) 2차회담(94.9.23~10.17) 제네바 합의(94.10.21)

*출처: 손문수,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9), p.186.

2)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1차 북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몇 가지 사건으로 IAEA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수용 거부(1993.2.24)와 이것이 고조되어 발생한 준전시상태 선포(1993.3.8), NPT 탈퇴선언(1993.3.12), 핵연료봉 무단 인출(1994.5.24.)과 북한 IAEA 탈퇴선언(1994.6.13.)을 들 수 있다.

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안전조치협정 체결) 부시 대통령의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선언(1991.9.28)에 따라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결정(1991.10.28.)과 1992년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추가로 얻어냈다. 그러나 6회에 걸친 IAEA의 임시사찰에서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이 고조되자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과정들을 거쳐 결국 1차 북핵위기 발생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북한이 당시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결정이 대화나 협상이 아닌 강압적인 대응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4년 6월 15일 카터 전 미국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으로 상황이 급반전된다. 핵연료 무단 인출과 IAEA 탈퇴선언이라는 초강수를 둔 북한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차에 카터의 방북 성사는 북한에게 기회의 창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당시 한반도 긴장의 고조로 극도의 어려움에 처했던 김일성은 체면을 잃지 않고 협상카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모면할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카터가 그 수단을 제공해준 것이었다.⁸⁵⁾ 이것은 결국 북한에게 전략적 상황이 호기로 인식되었고 협상으로 가는 정책 선택을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 1차 북핵위기 시에 주요 쟁점은 바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IAEA의 특별사찰 요구였다. 이 전략적 상황은 북한에게 있어 제국주의자들의 폭압의 산물이자,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규범을 침범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북한은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85)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Addison Wesley, 1997), p.336. 이용준, 앞의 책, 2018, p.124에서 재인용

강경한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1] 제1차 북핵위기 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전략 환경		중심 패러다임	인식	정책선택
대외	· 양극체제의 붕괴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①	위협	· 은밀한 핵개발 · '선군정치' 통치이념 정립 · '준전시체제' 선포 · '북한식 사회주의' 강조
	· 동맹약화와 외교적 고립	②		
	· 1차 고위급 회담/카터 봉북	③		
	· 주한미군 전술핵철수	④		
대내	· 김일성 사망 및 권력승계		호기	
	· 내부 경제의 악화			· NPT 탈퇴 유보 · 제네바 합의
	· 집단의식 이완			
쟁점	· 재래식 전력의 열세			
	· IAEA 특별사찰 요구	①,②	위협	· 특별사찰거부 · NPT 탈퇴 · 핵연료봉 무작위인출



중심 패러다임	
①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②	주체와 자주성
③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④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위 [그림4-1]을 보면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대·내외적 전략환경이 대부분의 중심 패러다임의 렌즈를 거쳐 각각 위협(실선 화살표)과 호기(점선 화살표)로 인식되면서 이에 따라 북한은 정책선택을 각각 다르게 하였다.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정책선택에는,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 중 “주체와 자주성”,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순으로 높은 관념적 기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제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정책선택 결과가 어떠한 전략문화적 속성과 인식의 렌즈를 통해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주체와 자주성”,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이라는 중심 패러다임이 가장 많은 관념적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앞서 전략적 상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당시 양극체제의 봉괴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급기야 중국과 소련 등 주변 동맹국들마저 그 결속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점점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고 이 결과 대미 적대의식과 피포위 의식이 더욱 강화되어 당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주체와 자주성” 패러다임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제1차 북핵위기 때 쟁점사항이었던 IAEA의 특별사찰 요구가 북한에게 있어 제국주의자들의 폭압의 산물이자,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규범을 침범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더욱 강압적인 행태를 보인 이유(합리적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가 바로 여기서 설명되는 것이다.

제 2 절 제2차 북핵위기(2003~2008)

1) 대·내외적 상황

가) 2차 북핵위기 발생

제네바 합의로 북미 간 제1차 북핵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북미 간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했고, 미국의 대북 압박도 유지되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고체연료로 추정되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3단 로켓 추진 방식으로 시험 발사하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정거리와 고체연료 방식은 국제사회에 문제의 심각성을 고조시켰다. 이에 남한,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이 중단되었고, 북한의 불만 인식도 고조되어 갔다.⁸⁶⁾

제네바 합의는 1994년에 합의된 이후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로 붕괴될 때까지 8년간 유지되었다. 8년의 세월동안 제네바 합의 내용 중 일부가 북한에 의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가 이행되는 동안 그런대로 북한 핵문제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조금이나마 잊고 살 수 있었다. 실제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제네바 합의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들을 동결시킴으로써 위기를 8년 후로 넘겼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전에 이미 추출했던 플루토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이미 한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한 플루토늄을 확보했으리라 것이 일치된 평가였다) 핵동결만 했던 것은 결국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기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합법적 유예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우려가 바로 제네바 합의 후 약 10년 만에 현실로 다가왔다.⁸⁷⁾

86) Don Oberdorfer and Robert Carli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vised and updated third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2013), pp.319-320.

87) 이용준, 앞의 책, 2018, pp.141-143.

제네바 합의는 과거 북한의 핵활동의 진상 규명을 통해 북한 핵개발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핵동결을 통해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현상유지적 합의이자, 미래의 해결 가능성에 희망을 두고 핵심 쟁점 해결을 뒤로 미룬 잠정적 합의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이미 추출된 핵물질의 양에 대한 사찰과 검증은 경수로 중요 부분이 완공되는 6,7년 후로 연기되었고, 단지 미래의 추가적 핵활동을 막는 핵동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합의의 이행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막상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1994년의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이다.⁸⁸⁾

제네바 합의와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상호연계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2개의 연계 고리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1조 2항의 “핵동결에 따른 에너지 보상을 위해 중유를 제공한다.”는 규정에 따라 핵동결과 중유 제공이 상호 연계되어 있었고, 경수로 건설 완성에 따라 북한의 핵사찰과 핵시설 해체, 폐연료봉 국외반출 등 북한 측 의무사항들이 또 하나의 연결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제네바 합의 이행의 과정을 핵동결의 대가로 중유공급을,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경수로제공을 하는 두 개의 경로로 인식하고 운영했는데, 이것은 경수로 문제로 제네바 합의가 과행상태에 이르렀을 때(경수로 공사장 현장에서의 노동신문 훼손사건 등)나 남북한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북한 잡수함 강릉해안 침투 사건 등)에도 북한의 핵동결이 유지되는 한 중유공급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다.⁸⁹⁾

이를 분석해 볼 때 핵동결은 중유공급과 연계되어 처음부터 이행된 반면, 핵사찰과 핵폐기 등 북한의 의무사항들은 경수로 공사가 완공되는 6~7년 이후에야 제대로 이행시기가 도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시기가 올 때까지 KEDO는 기약 없는 먼 미래의 약속으로 경수로 공사를 진행해야만 했고, 결국 모든 것은 북한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정세가 결코 조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

88) 이용준, 앞의 책, 2018, p.139.

89) 위의 책, pp.139-140.

행 기간 중 한반도에서의 남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차례 경색국면을 가져온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다음과 같다.

[표 4-2]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의 도발 일지

1995. 5. 30	북한, 제86우성호 나포, 7개월 억류(어부 3명 사망)
1995. 7. 9	북한, 중국 연길지역에서 안승운 목사 납북(미송환)
1996. 4. 5	북한, 비무장지대 무효화 선언(3일간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시위)
1996. 9. 18	북한 잠수함 강릉해안 침투 사건
1997. 2. 15	북한, 탈북한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암살
1997. 7. 16	북한군 14명 군사분계선 월경 침투, 한국군과 교전
1998. 6. 22	북한 잠수정 속초해안 침투 사건
1998. 8. 31	북한, 대포동 1호 시험발사
1998. 11. 20	북한 간첩선 강화도 침투 미수사건
1998. 12. 17	북한 반잠수정 여수해안 침투 사건
1999.	북한,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농축기술 및 원심분리기 샘플 도입
1999. 3.	북한, 일본으로부터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 부품을 수입하려다 적발
1999. 6.6~15	제1차 연평해전
2001. 12.	북한 간첩선, 일본 침투공작 중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해 격침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출처: 이용준,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반도 핵 게임의 종말』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8), p.153.

위 [표 4-2]에서 주요 사건들의 목록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제네바 합의 이후 결코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가 변경되었거나 핵무장을 향한 그들의 의지와 열망이 중단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도 제네바 합의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네바 합의가 외교적 성공사례로 남기를 희망했던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인내와 노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인내와 노력도 북한이 핵사찰을 받고 영변 핵시설을 해체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핵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약속의 시간’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지속될 수도, 끝날 수도 있었음이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이행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수로는 절대로 완공될 수 없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당시 전력생산량의 2배를 단숨에 얻을 수 있는 2000MW의 경수로를 조기에 완공할 강한 의지와 그것에 대한 진

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시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와 KEDO는 이 문제에 관한 북한의 선택은 북한의 핵 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겼고, 북한이 핵사찰을 자발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 권유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이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북한이 경수로의 완공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다.⁹⁰⁾

결국 2002년 10월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평양 방문에서 제기된 HEU 프로그램의 문제는 그동안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제네바 합의 이행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미국의 기대를 저버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미국은 켈리 특사와 강석주 부부장의 회담 간에 강석주 부부장의 발언은 우라늄 농축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유지의 상징이었던 중유공급 중단을 2002년 11월 13일에 발표하였고, KEDO는 경수로건설 재검토를 발표(11.15)하면서 북한은 곧바로 핵동결 해제 선언(12.12)에 이어 단시간 내에 핵동결 해제 조치를 추진(12.22~24)하고, IAEA 사찰관에게 추방 조치를 통보(12.27)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듬해 2003년 1월 10일 북한의 NPT 탈퇴로 이어졌다. 제2차 북핵위기의 시작이었다.

2002년은 [표 4-3]에서 보듯 위기가 고조되어가는 시기였고, 주요 내용의 과정은 보는 것과 같이 9.11 테러 이후 WMD와 잠재적 테러 위협국에 대해 민감해져 있던 미국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북 강경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압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두 나라 간의 입장은 결국 제네바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고 말았다.

지금까지 제네바 합의가 붕괴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1차 북핵위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 미국의 인내와 기다림에도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이행 하지 않았고, 핵동결만 한 채 미국으로부터 중유공급까지 받아가며 핵개발을 위한 8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중유공급 중단과 경수로 건설 재검토 등의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90) 이용준, 앞의 책, 2018, pp.154-156.

미국에 협상의 손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NPT탈퇴라는 강압정책으로 대응했다. 1차 북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게 핵포기라는 것은 체제의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자주권 침해라고 느끼고 있던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 강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고립을 점점 강화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도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 악화는 북한 정권에게 위협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표 4-3] 제2차 북핵위기로의 과정(2002~2003)

시기	내용
위기의 고조 2002.01.29 ~ 2002.12.31	<p>부시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발언(01.29) 북, "부시의 발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성명(02.01) 미국방부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핵 선제사용 가능 대상 7개국에 북한을 포함(03.09) 북, NPR에 반발 미국과 모든 합의 재검토 주장(03.13) 북, 미국의 핵사찰 수용 요구 거부(08.13) 럴스펠드 미국방장관, '북 이미 핵무기 보유' 주장(09.16)</p> <p>켈리 차관보, 강석주 북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10.03~05) -북, 켈리 차관보에게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시인(10.04) 켈리 특사, '북 HEU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계획 추진 시인' 발표(10.16) 미 NSC, 대북한 중유공급 중단 발표(11.13) KEDO, 경수로 건설 등 KEDO사업 재검토 발표(11.15) 북한,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 선언(12.12) 북한, 핵동결 해제 조치 개시(12.22~24) -영변 핵시설의 IAEA 봉인 제거, 감시 장치 제거 IAEA, "북한이 1000여개의 핵 연료봉을 장전했다"고 발표(12.26) 북, IAEA 사찰단원 3명 추방 통보(12.27) 미, 대북 '맞춤형 봉쇄' 정책 돌입(정치·경제·제재)(12.29) 북, NPT 탈퇴 가능성 시사(12.29) IAEA 북핵 감시 사찰단 2명 북 추방 통보에 따라 철수(12.31)</p>
2차 북핵위기 (2003.01.10)	<p>북, NPT 탈퇴 선언(01.10) / 제2차 북핵위기 시작 -북 외무성, 핵시설 가동 재개 및 운영 정상화 공표(02.05) -미 백악관 NSC,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02.26)</p> <p><뉴욕타임즈>, "외과수술적 미사일 공격부터 집중폭격, 심지어 전술 핵무기를 쓰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p> <p>부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 해결 안 될 경우, 마지막 선택은 군사행동이라고 언급(03.03)</p>

*출처: 조민·김진하, 『북핵일지』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22~27을 참고하여 재작성.

나) 6자 회담과 3번의 합의

이제부터는 6자 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을 둘러싸고 어떠한 전략환경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북한, 중국 3자 회담을 제의하고 2003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나 북한의 선 핵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핵 포기와 상응조치의 동시 진행을 주장하는 북한의 기준 입장 차이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결국 2003년 8월 27일~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6자 회담은 출범부터 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핵 심과제는 바로 핵프로그램 해체 문제, 합의 이행 문제, 경수로 제공 문제, 대북한 안전보장 문제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모든 현안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정면 대립하여 회담은 난항을 거듭했고, 미국의 선 핵폐기 주장과 북한의 후 핵폐기 주장이 최대 쟁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붕괴의 경험을 토대로 핵 폐기 없이 장래에 대한 약속을 신뢰 할 수 없으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의 이행을 북한에 촉구하였다. 북한은 리비아식 선 핵폐기 방식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핵동결을 실시한 이후 핵 폐기 협상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회담은 교착단계에 빠졌으나 중국은 자국이 주도한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다행히 북한과 미국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결국 제4차 6자회담의 결과 2005년 9월 19일 이른바 ‘9.19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2차 북핵 위기 이후 최초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었다.⁹¹⁾ 9.19 성명을 통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 후 NPT 복귀를 약속했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핵무기 불사용, 북미 관계정상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성명 다음날 BDA(방콕텔타아시아) 금융제재를 실행하

91) 외교통상부, 『2006년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6), pp.33-34.

[표 4-4] 6자 회담의 과정(2003~2008)

시기	내용
6자회담으로 과정 2003.04.23 ~ 2003.08.27	<p>북-미-중, 북핵 3자 회담 개최(4.23~25) 북, 외무성 담화 “먼저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5.24) / 미, 양자회담 거부(5.27) 불튼 미 국무부 차관, CVID 해결 주장(6.4) 중, 다이빙궈 외교부 부부장 방북(7.12~15) : 다자회담 설득, 북한 거부 북, 다자회담 수용 의사 한·미·일·중·러 통보(7.23~25) 중, 왕이 외교부 제1부부장 방북, 6자회담 일정 합의(8.7) 제1차 6자회담 개최(베이징, 8.27~29)</p>
6자회담 2003.08.27 ~ 2008.12.11	<p>제2차 6자회담(2004.2.25.~28) 제3차 6자회담(6.23~26) - 쟁점 : 미, 선 핵폐기 ↔ 북, 핵동결 후 핵폐기</p> <p>부시 2기 행정부 출범(2005.1.20.) -자유 확산과 폭정의 종식 강조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명자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1.18) 북, 핵무기 보유 선언(2.10) 6자회담의 군축회담으로 전환 주장(3.31) 북, 핵 연료봉 인출완료 발표(5.11)/영변 5MWe 원자로 재가동(6.18) 중국의 6자회담 중재(탕자쉬안 국무위원 방북, 7.13) 제4차 6자회담(7.26~8.7) 9.19 공동성명(9.19) 미, BDA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9.20)</p> <p><u>BDA, 북과 거래중단 선언(2006.2.16.)</u>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대포동 2호 실패, 7.5) UN 안보리, 안보리 결의 제1695호 민장일치 채택(7.15) 북, 6자회담 북극 거부(9.17 / 9.26) 북, 핵 실험 계획 발표(10.3) 북, 제1차 핵실험(풍계리, 10.9) 제5차 2단계 6자회담 개최(베이징, 12.18) -북, BDA 재재 해제 선결 요구</p> <p>BDA문제 합의(김계관 부상-힐 차관보/2007.1.16.~18) 2.13 합의(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10.3 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p> <p>북, 핵신고서 제출/미국, 테러지원국에서 북 해제 절차 착수(2008.6.26.)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6.27) 미, 테러지원국에서 북한 해제(10.11) 북, 불능화 작업 재개(10.12) 미-북 검증합의서 채택 실패(12.8~11)</p>

*출처: 조민·김진하, 『북핵일지』(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28~59를 참고하여 재작성.

면서 북한의 대미 불신은 고조되었고, 이것은 결국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BDA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더 이상 진전이 없자 결국 두 나라는 이듬해인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BDA 문제 합의를 위해 양자회담을 개최하였고, 양자는 중유 제공과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BDA 문제가 해결되자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인 2.13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참여국들은 2.13 합의에서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북한은 비핵화 초기 단계 이행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 9월 27일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인 10.3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이 합의에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조치에 착수하였으나 북한 비핵화 사찰과 검증의 문제에서 두 나라 간 이견이 대립되었고, 결국 북미 핵문제 해결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다) 북한의 국내 상황

당시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은 고난의 행군이 지나고 경제난이 다소 해소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는 3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다. 먼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협력, 금강산 관광 개시 등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늘어나면서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시장 경제활동을 용인한 조치였다. 물론 이 조치로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 개선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의 상행위를 통해 그나마 배급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셋째, 주변국들의 대북지원에 의해 북한 경제난이 해소되었다. 6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에 식량, 비료, 중유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문제 개선된 상황을 북한 당국은 선호하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기본정책은 바로 '자력갱생', '자강' 등 주체사

상에 근거한 ‘우리식 사회주의’ 확립에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외부의 영향력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어 대중들의 의식과 사상에 균열을 생기게 하여 김정일 자신의 권력 통제력을 잃을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도 북한 당국에게 부담으로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개성공단 근무자들이 폐쇄된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외부세계에 대한 수용력이 증가하고, 북한 경제개방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기에 이는 북한에게 충분히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북한은 폐쇄적 경제시스템의 균열이 가져올 사회질서의 이완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세계 쇠약의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결과만 낳았다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북한과 북핵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19테러 이후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 특히 미국은 9·19테러 이후 반테러와 반화산을 최우선적인 국가안보전략으로 내세웠다. 2002년 1월 미 의회에 제출된 NPR(Nuclear Posture Review Report)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한편,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과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였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재확인하기에 이르렀다.⁹²⁾ 이러한 미국의 정책기조는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높이기에 충분하였다.

92) 이우태 외,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전망이론을 통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53.

제2차 북핵위기와 제1차 북핵위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나 상당히 광범위한 차이점들이 있다. 먼저 미국 집권당 교체에 따른 정책상의 차이였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시각변화였다. 세 번째 차이점은 북한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를 목격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임하는 입장은 한마디로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 변화였다.

앞서 제2차 북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HEU 프로그램 문제와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 핵사찰과 핵 폐기 검증의 시간이 도래하였을 때에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통하여 북한은 제1차 북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조금도 물러섬 없이 그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며 미국을 위협했으나 미국은 이에 미동을 하지 않았다. 바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이미 미국에게 학습되어 버려 단순한 반복적인 행동으로 치부되어 미국이 이를 무시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⁹³⁾

제1차 북핵위기 시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이란 구도가 제2차 북핵위기 때에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로 다자회담으로 변경되면서 북한은 제재와 개방이라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한편으로는 국제 사회로의 참여를 강요받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이라는 자국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책조차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안보적 차원에서 그동안 친구와 적에 대한 인식에 도전받아야 했다. 6자 회담에 참여했던 국가들 중 북한에게 미국과 일본, 한국은 적대국이었고,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 동맹국들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6자 회담에서 각 국가들은 이념보다 모두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였으며, 북한과의 모든 상황을 북한의 입장이 아닌 자국의

93) 이용준, 앞의 책, 2018, p.180.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다.⁹⁴⁾

6자 회담 내내 북한은 미국과 핵 폐기 시기와 검증방식,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후 쟁점이었던 BDA 문제를 놓고 많은 이견을 보였고, 이러한 시간별기용 전략은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도록 하여 핵보유에 대한 모호성에서 핵보유국이 당당하게 되었다는 입장 전환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제2차 북핵위기 동안 체제 내부 상황을 지나치게 노출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것은 거부와 두려움의 정서와 결부되어 그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했으며,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림 4-2] 제2차 북핵위기 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전략 환경		중심 패러다임	인식	정책선택
대외	·6자회담 참여 압박 ·미국 대북제재 강화 ·BDA, 테러지원국해제 ·CVID 수용 압박			
대내	·7.1 경제개선 조치 실패 ·시장경제활동 증가 ·남북경제협력 증가 (개성공단 운영) ·선군사상 대두	① ② ③ ④	위협	·핵개발 지속 ·NPT 탈퇴 ·폐연료봉 재처리
			호기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 ·핵시설 동결, 불능화
	·BDA 문제 ·검증과 핵 폐기	①, ② ③	위협	·제1차 핵실험 ·검증방법 미합의



	중심 패러다임
①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②	주체와 자주성
③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④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94) 손효종, 앞의 논문, pp.191-192.

위 [그림4-2]를 보면 제2차 북핵위기 당시 대·내외적 전략환경이 어떠한 중심 패러다임에 영향과 상호 연계되어 당시 북한의 정책결과로 이어졌는지 살펴 볼 수 있다. 제2차 북핵위기 때는 제1차 북핵위기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4번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의 영향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도 분석하였지만 이것을 통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내적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서 체제안정에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2번 “주체와 자주성”的 중심 패러다임이 많은 관념적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북한이 2차 북핵위기 때 당면한 전략환경이 북한 내부 상황을 많이 노출하게 되는 경우(주체와 자주성에 훼손이 되는 경우)로 직면하게 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들의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정책적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제2차 북핵위기 때에도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계속되었다는 사실도 분석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6자회담을 진행하는 당시에도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종합해서 보면 제2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정책선택에는,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 중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주체와 자주성”,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순으로 높은 관념적 기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제 3 절 제3차 북핵위기(2009~2018)

1) 대·내외적 상황

2006년과 2009년 각각 1차, 2차 핵실험을 수행한 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보유국 선언을 하며 핵보유국에 대한 지위를 얻고자 한 것은 이를 대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주변국 리더십이 교체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리더십도 교체되는 상황을 맞았다. 1994년 이후 2011년 북한은 이전 통치자에서 다음 통치자로 권력이 승계되는 또 한 번의 분기점이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내부적인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1인 독재 체제였던 북한에게 있어 권력이양이라는 것은 통치 정당성이 위협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증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체제 내구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이용하여 대내적 도전요인들을 극복하고 기존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 국내적으로 2중의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는 2012년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에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열어야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김정은 후계 체제를 안정적으로 승계 및 구축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강성대국의 가시적인 성과와 비전을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고,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조기에 새로운 후계자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대내 불안요소들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정일은 사망하기 직전까지 경제대국건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 2009년 1년 동안 경제시찰 63회, 군 시찰 25회를 실시했고, 2010년에도 5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고 경제시찰 58회와 군 시찰 11회를 각각 소화했다. 2011에도 마찬가지로 5월과 8월 각각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였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제시찰 20회와 군 시

찰 12회를 실시하면서 경제대국건설에 몰두했던 것으로 보인다.⁹⁵⁾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대국건설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2009년 11월 30일에는 화폐개혁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단행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로의 복귀실패, 물가폭등과 환율의 급상승 등을 초래하며 오히려 내부적인 불만을 증폭시켰다.

강성대국이 다급해진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와 150일 전투, 100일 전투로 이룬 속도전 건설사업 등을 제시하며 2010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평가하고, 2010년이 또한 당 창건 65주년임을 강조하면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을 중단하는 후속조치를 내렸고, 국제사회 의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 조차도 2009년에 비해 35%로 감소하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불만을 가중시켰을 것이다.⁹⁶⁾

한편 2009년 미국 대통령에 새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실용성과 현실성을 부여한 다자주의와 힘의 균형, 스마트 파워를 강조하며 동북아시아에서는 재균형 정책을 앞세워 적극적 관여에 관심을 보이는 정책을 펼쳤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교훈삼아 오바마 행정부는 보다 신중한 ‘전략적 인내’를 표방한 대북정책을 내세웠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의지 확약을 전제로 한 6자회담 복귀, 둘째, 북미회담 또는 6자회담 복귀 전 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대화 선행, 셋째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역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넷째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제재와 군사훈련)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⁹⁷⁾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핵문제에 대해 겉으로는 온건하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9.11테러와 실패를 거듭했던 핵협상에 대한

95)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남기성 역, (서울: 창비, 2012), p.296.

96) 유영식, “제1-5차 북한 핵실험 결정요인 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7), p.147.

97) 손효종, 앞의 논문, p.197.

교훈으로 오히려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더 가까웠고,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그에 대한 보상과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기준의 미국의 입장은 유효하였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제3차 북핵위기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⁹⁸⁾ 2008년 12월 6자회담에서 검증합의에 실패한 이후 미국은 북한에 중유지원을 중단(2008.12.12.)하였고, 이것은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2009.4.14.), IAEA인원 추방(2009.4.15.)으로 이어졌고, 광명성 2호 발사(4.5.)와 제2차 핵실험(5.25)을 강행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천안함에 대한 어뢰공격과(2010.3.26.), 연평도에 대한 포격도발(11.23)이라는 재래식 도발을 감행하여 남한과 급랭한 관계를 유지하더니 갑자기 2011년에 들어와서는 ‘전제 없는 6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외무성 대변인의 입장을 표방하며 북미고위급 회담이 2011년 7월과 10월에 열리게 되었다. 이후 2012년 2월 2.29합의가 도출되어 북미 간 핵 협상에 진전이 있어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김정은은 4월 13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을 계기로 광명성 3호 위성발사를 감행하였다. 이 일로 2.29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양자 간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더 이상 북핵 문제를 논의할 협상의 장이 마련되기 어려워졌다.

대미 강제를 상실한 북한은 이후 핵무기 고도화에 몰두하게 되는데, 먼저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2012.5.30.)하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2013.3.31.)과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 채택(2013.4.1.) 등 핵보유국으로서의 일련의 제도화 작업으로 나타났다. 이제 북한의 핵능력은 수평적 확산의 단계를 넘어 수직적 확산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위성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본인들의 핵무기 수준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핵실험만 총 4회를 더 실시하여 핵무기의 ‘표준화, 소형화, 규격화, 경량화, 다종화’를 달성하고,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보에 주력하였고, SLBM 발사, 북극성 1~2호 발사, 그리고 화성 15호 발

98) 손문수, 앞의 논문, pp.170-173.

사 성공을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2017.11.29.)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2008년 12월 마지막 6자 회담 이후 거의 10년만이고, 2.29 합의로부터는 거의 6년만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의 핵 도발과 미사일 실험 등은 체제 생존에 있어 지속가능한 전략이 아니며, 증강된 핵억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미국과 담판하여 실리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2)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제3차 북핵위기도 제1~2차 북핵위기와 마찬가지로 ‘선 핵포기 후 보상’과 ‘선 보상 후 핵 포기’를 둘러싼 북미 간의 평행한 입장 차이만을 지속하였다.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었고 북한을 둘러싼 전략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미국을 계속하여 압박하여 나갔지만,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으로 이를 무시하는, 아니 거의 방치하는 수준의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의 위협인식은 더욱 고조되었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극단적인 핵 실험(4~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 등으로 나타났고 이는 점차 그들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초반 북한과의 기싸움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갈등으로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부르며 조롱하였고, 북한은 이를 최고 존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기간 동안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핵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는 미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지역 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이후로 북한은 기존의 유지해 온 조건부 핵 폐기가 아닌 지속적인 핵추구 강행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의 담화나 외무성 성명에서 비

핵화를 위한 핵보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등 방어적 메시지 보다 전략 균형, 자위적 핵 억제력 확보와 같은 공세형 메시지가 늘어나는 것은 이를 증명해 준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기정사실화는 우선 대내적 측면에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성공적인 권력승계를 통한 체제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달성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국들에 의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가해져 장기적으로는 대내 정치적 안정성도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련의 매뉴얼에 따라 장기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이러한 승계과정의 시간이 짧았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북한 권력의 정면에 등장하게 된 탓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⁹⁹⁾ 따라서 일부에서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전까지 별다른 외부적 동향이 없었던 것은 그러한 권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내부적 단속 즉, 숙청과 공포정치를 실행하였던 이유에서 찾는 분석도 많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숙청된 북한 관료 및 군 엘리트 수가 72명¹⁰⁰⁾에 따른다는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된다.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에 대한 무리한 암살 역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김정은 정권이 제도적으로 촉약하고,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조급하게 매달리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4-5] 북한의 핵실험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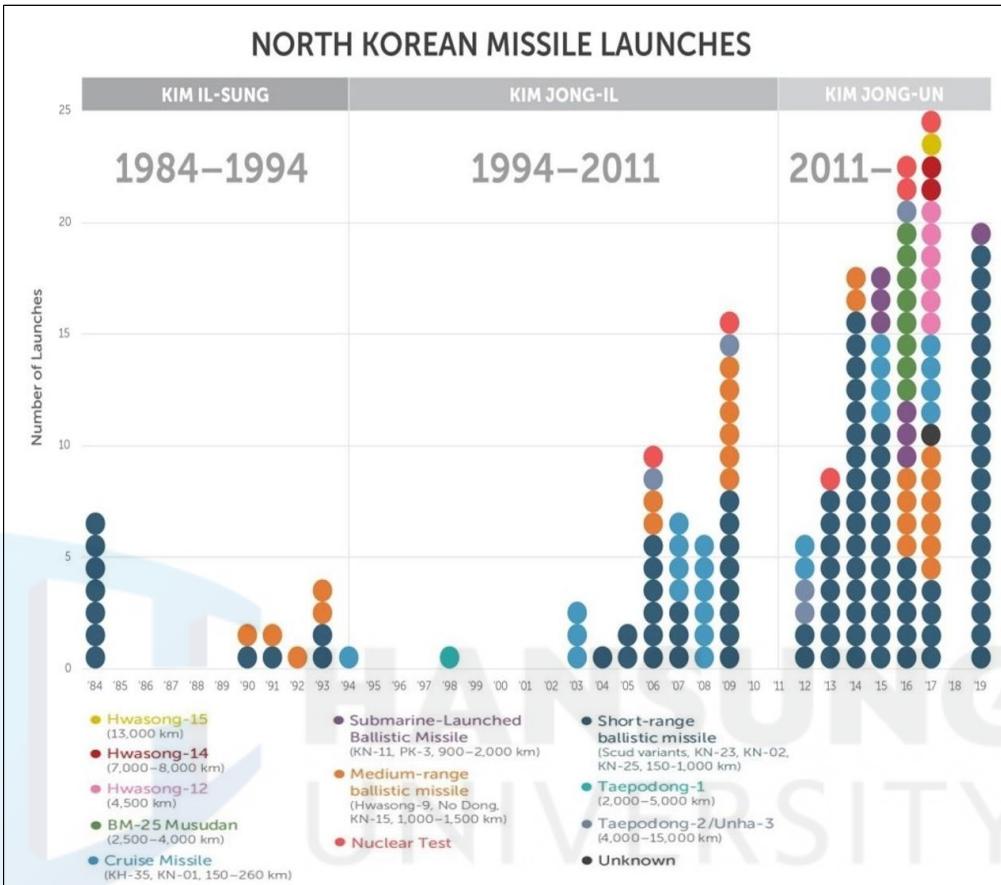
연도	핵실험	지도자	집권 후 기간
2006	1차 핵실험	김정일	12년
2009	2차 핵실험	김정일	15년
2013	3차 핵실험	김정은	1년
2016(1월)	4차 핵실험	김정은	4년
2016(9월)	5차 핵실험	김정은	4년
2017	6차 핵실험	김정은	5년

*출처: 연구자 작성.

99) 김태진 외, 앞의 책, p.239.

100) 김태진 외, 위의 책, p.240.

[그림 4-3] 북한의 정권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현황



*출처: <https://missilethreat.csis.org/north-korea-missile-launches-1984-present/>
(접속일: 2019. 12. 22.)

위 [표 4-5]와 [그림 4-3]에서 보듯이 김정은 정권 기간에 이루어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빈도는 김정일 정권 기간에 비해 크게 비교된다. 김정은은 영구적인 적대국이며 가장 큰 적인 미국의 핵위협과 대북 적대 시 정책으로 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러한 핵 강국으로의 도약은 김정은의 지도력 하에 이루어 졌음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켰다.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불안한 내부 체제 단속과 권력의 공고한 승계 작업이 시급히 필요했고, 정당성의 공백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으로 작용했는지를 증명해 준다.

[그림 4-4] 제3차 북핵위기 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

전략 환경		중심 패러다임	인식	정책선택
대 외	· 미국의 재균형 정책	①	위협	· 위성(미사일)발사 (2.29합의 파기) · 핵-경제 병진노선 · 핵무장 제도화/고도화
	· 미국 대북제재 강화	②		
	· 핵보유국 불인정	③	호기	
대 내	· 김정은 권력승계	④		· 국면의 전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 북미대화(핵 협상)
	· 경제제재 압박			
	· 체제의 불안정			
	· 핵무력 완성			
쟁 점	· 체제의 불안정 (권력승계)	①, ② ③, ④	위협	· 제4~6차 핵실험 · 핵무기의 고도화
	· 트럼프 정부 등장		호기	· 북미 대화

중심 패러다임	
①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②	주체와 자주성
③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④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위 [그림4-4]를 보면 제3차 북핵위기 당시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예상했던 기대와 달리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북한의 정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되었음을 분석 할 수가 있다. 제1~2차 북핵위기와 비교했을 때 제3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3번 “핵통치 신념의 강화” 패러다임이 가장 많은 기여도를 보였다는 사실이다.¹⁰¹⁾ 또한 2번 “주체와 자주성” 패러다임 역시 많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이 본인의 권위와 세습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선군정치’를 2009년 9월 28일 제9차 개정헌법 <사회주의 헌법>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공식적으로 명문화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하였으며, 그리고 김정은이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 제시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등의 행보를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조되었음 역시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역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3차 북핵위기의 시기 때 북한의 정책선택에는, 중심 패러다임 중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주체와 자주성”,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순으로 높은 관념적 기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제1차 북핵위기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인 1번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이 제2차 북핵위기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점점 낮아진 것으로 비추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완성과 고도화를 통하여 이제 미국과 외교적으로도 부담 없이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최근 김정은 정권의 행보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정확한 사실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전략문화에 기초한 중심 패러다임의 분석의 중요성과 그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101)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냉전의 종식’이란 시기적 표현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냉전 이후 지금까지도 ‘핵통치’ 신념이라는 요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제 4 절 소결론

1) 메커니즘의 형성: 정책선택의 일관성

본 장에서 북한의 제1차 북핵위기에서 제3차 북핵위기까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북핵위기 시 북한이 전략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 선택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3가지 사례 분석 결과 북한은 매 수간 일관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이 왜 30년의 세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이 북한이 전략환경을 인식함에 있어 그들 인식 체계 속에 지도화 (cognitive map) 되어 있는 중심 패러다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제1차 북핵위기 시 제네바 합의를 했던 것은 당장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핵무기 개발 의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고, 이는 시간획득과 체제생존을 위한 일관된 정책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중심 패러다임의 지속: 1~3차 북핵위기

또한 이번 분석을 통하여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중심 패러다임이 제1차 북핵위기부터 제3차 북핵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시기별로 각 중심 패러다임이 관여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각 화살표의 빈도수가 바로 해당 시기에 중심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여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반대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시기별 중심 패러다임의 관여 정도를 따로 추출해 내어 이를 역으로 분석하면 아마 해당 시기에 북한의 어떠한 정책적 선택이 강하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표 4-6] 제1~3차 북핵위기의 북한 핵정책 경로(1991~2018)

구 분		북한의 대안	북한 핵정책의 선택
1 차 위 기	1991~1993 남북 협상 북-IAEA 협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핵안전조치 협정)	A: 북한-IAEA 협상 (일반사찰, 특별사찰) B: 북한-남한 협상 (남북 상호사찰) C: 북미 직접협상	-IAEA 임시사찰 및 일반사찰 수용 -IAEA 특별사찰 및 남북 상호사찰 거부 -NPT 탈퇴 -핵연료봉 무작위 인출 C: 북미 직접협상
	1994~2002 북미 협상 (제네바 합의)	A: 제네바 합의 이행/편승 B: 제네바 합의 적극적 파기 C: 제네바 합의 유지/소극적 파기	-핵동결 이행 (중유지원 획득) -은밀한 핵확산(우라늄 농축) 시도 -미국 중유지원 중단 후 핵동결 해제 C: 제네바 합의 유지/소극적 파기 => 핵억지력 강화, 새로운 협상 기회 모색
	2003~2008 6자회담 (9.19 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A: 9.19 공동성명 및 후속합의 완결 B: 9.19 공동성명 및 후속합의 장기화 C: 9.19 공동성명 및 후속합의 협상 교착	-핵신고서 제출, 가역적 단계 (동결, 불능화) 이행 -불가역적 단계 진입 거부 (사찰 및 겸증방법에 미합의) C: 9.19 공동성명 및 후속합의 협상의 교착 => 핵억지력 강화, 북미 양자협상 기회 모색
	2009~2012 북미 협상 (2.29합의)	A: 2.29 합의 이행(6자회담 복귀) B: 2.29 합의 적극적 파기 C: 2.29 합의 소극적 파기	-2.29 합의 후 위성발사 계획 공표 -위성발사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니므로 합의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B: 2.29 합의 적극적 파기 => 핵억지력 강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추구
	2013~2017 6자회담 및 북미 협상 남북 협상 교착	A: 협상 북미 양자협상=>6자회담 복귀 B: 확산 (핵억지력 강화)	-UN제재, 개별국가 제재 감수 -핵실험(4회), ICBM시험 발사 B: 확산: 핵억지력 강화 => 국가 핵무력 완성,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모색
	2018~	A: 협상: 공개적 핵확산 중단 남북, 북미, 6자회담 B: 확산: 공개적 핵확산/은밀한 핵확산 지속 (ICBM 실전배치 등 최소억지 추구)	-공개적 핵확산 중단 선언 자발적 비핵화(선행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요구 -단계별 동시행동, 선 관계개선 -북미 협상을 통한 편승 모색 A: 협상: 남북, 북미

*출처: 손문수,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9), p.177.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갑작스런 NPT탈퇴선언과 준전시상태 선포 등의 행보는 문화적 속성을 통해 읽어내지 않고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1991년 5월 남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을 하였고, 같은 해 9월 27일에는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어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과 12월 18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한국 내 핵부재선언이 이뤄졌고, 이는 같은 해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이듬해 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다. 그 결과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임시 사찰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냉전의 해체가 본격화되던 시점에서 북한이 이전에 비하여 미국의 핵 위협이 증가했다고 인식할 만한 근거를 추측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소련의 해체와 한중수교 등으로 핵우산이 제거되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극적 안전보장(NSA) 원칙에 의거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의 NSA 원칙에 대해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당시 제1차 북핵위기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핵심이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사실 가운데 하나는 당시 미군이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언급한 몇 가지 내용들이다. 즉, 전술핵이 철수하더라도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하며, 오키나와와 팜에서 투사되는 전술핵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성턴의 언급이었다.

동맹국의 안보불안을 달래기 위한 미국 당국의 언급이 완전한 핵우산

제거를 기대했던 북한에게는 한반도 유사시 전술핵이 해외에서 투사되는 이러한 새로운 핵 사용교리에 대해 약속위반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마도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으면서도 미신고 시설 2곳에 대해 끝까지 사찰 불허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미국의 NSA에 공약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름대로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이 전술핵 철수라는 사실보다 단순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언급된 해외에서로부터의 전술핵의 투사에 주목하게 만든 과정은 바로 전략문화적 속성이 논리구조 속에 내재되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이라는 인식의 렌즈가 당시의 상황을 북한에게는 위협과 압박으로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략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형성된 북한의 위협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 선택이 애초에 수위가 낮았던 위협마저 높은 위협인식을 하게 만들고 북핵위기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북한의 제1차 북핵위기부터 제3차 북핵위기까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북핵위기 시 북한이 전략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 선택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북한은 매 수간 일관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북한 정권에 주어진 전략환경이 호기로 인식되면 유화정책을, 위협이라고 인식되면 강압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때 유화정책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계산된(중심 패러다임의 지속) 시간 벌기용 타협이었다.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정책선택에는, 중심 패러다임 중 “주체와 자주성”,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순으로 높은 관념적 기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제2차 북핵위기 때는 제1차 북핵위기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4번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의 영향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통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

난의 행군 등 국내적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서 체제안정에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었다. 제2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정책선택에는, 중심 패러다임 중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주체와 자주성”,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순으로 높은 관념적 기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3차 북핵위기 시 북한의 정책선택에는, 중심 패러다임 중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 “주체와 자주성”, “일인 지배체제의 존속과 안정 추구”,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 순으로 높은 관념적 기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제1~2차 북핵위기와 비교했을 때 제3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의 중심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3번 “핵통치 신념의 강화” 패러다임이 가장 많은 기여도를 보였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시기별로 중심 패러다임의 지속성은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각 중심 패러다임이 관여하는 정도의 상대적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1차 북핵위기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인 “대미 적대의식과 제국주의 위협에의 피포위 의식”은 제2차 북핵위기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점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냉전의 종식과 ‘핵통치’ 신념의 강화”라는 패러다임은 점점 시기가 지날수록 관념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완성과 고도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달성하는 동시에 항상 위협적 존재로 인식했던 미국과 외교적으로 당당히 마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할 수가 있다. 이는 실제 최근 김정은 정권의 행보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정확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결과들이 이번 연구의 목적인 전략문화에 기초한 중심 패러다임의 분석의 중요성과 그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서 전략문화 이론이 가지는 그 유용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 우리가 단순히 북한을 ‘불량국가’, ‘비이성적인 국가’로 단정 지어 북한의 정책은 불합리하고,

예측불가능하다는 선부른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이번 연구를 통해 전략문화이론으로서 북핵위기를 분석하는데 많은 유용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점과 분석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북핵위기를 분석함에 있어 대미관계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사실 북한의 문제는 대외적 환경 분석에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많은 주변국들의 영향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든 국가들을 포함한 분석을 논의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아 북핵위기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협상의 당사자였던 미국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대외적 환경 분석에 있어 다양한 국가들의 요소들을 함께 포함시켜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북한의 핵개발 원인의 객관성과 북한 전략문화 연구에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문화이론 자체가 가진 한계점도 이번 연구에 있어 많이 부족한 점이라 생각이 된다. 앞서 연구 초반에서도 밝혔듯이 이 이론은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이론적 틀과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 전략문화라는 이론적 분석틀로써 한 국가의 전체 역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략문화로 단정 짓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북한의 모든 대·내외적 행태가 이러한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문화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기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문맥(context)을 형성하는 것일 뿐, 높은 수준의 인과성(causality)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문화 이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전략문화라는 변수를 통해 바라보고자 연구의 목적을 한정하였고, 연구의 분석수준과 시기의 범위도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변수가 기능하는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의 메커니즘을 하나의 큰 틀로 놓

고 그 속에서 인식의 영역이자 독립변수의 하나로 중심 패러다임을 함께 분석하는 과정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심 패러다임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4가지 외에도 충분히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여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 강압적인 정책선택이냐, 협상 타결로 가느냐 하는 것은 중심 패러다임이 정책선택에 미치는 관념적 기여도에 따라 달라졌다고 분석되었는데, 앞으로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패러다임 관여도의 상대적 차이와 이를 역으로 분석하여 해당 시기에 북한의 어떠한 정책적 선택이 강하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더욱 진행된다면 북한 핵개발의 원인 분석 연구에 더욱 진척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권효림·김용호. (2014). “북한 핵실험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인지적 접근: 제1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 99–132.
- 김준엽 편. (2010). 『북한연구자료집 제6권』.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 김태진 외. (2018). 『북한과 국제정치』. 서울: 늘품플러스.
- 남궁영. (2003). “북한 핵개발과 미국: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 13(2).
- 돈 오버도퍼 지음. (2003). 『두 개의 한국』. 이종길 옮김. 서울: 길산.
- 로렌스 손드하우스 지음. (2007). 『전략문화와 세계 각국의 전쟁 수행 방식』. 이내주 옮김.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문장권. (2016).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정미. (2014).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핵개발 결정요인과 향후 과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6(1), 39–64.
- 서대숙. (1989).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 서재진. (2006).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6(11).
- 손용우. (2012).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호철 외. (1991).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손효종. (2016). “북한 전략문화와 핵개발의 전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신정현. (2000). 『비교정치론』. 서울: 법문사.
- 앤드류 퍼터 지음. (2016). 『핵무기의 정치』. 고봉준 옮김. 서울: 명인문화사.
- 와다 하루끼. (2012).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남기성 역. 서울: 창비.
- 외교통상부. (2006). 『2006년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 유영식. (2017). “제1~5차 북한 핵실험 결정요인 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우. (2017). 『북한정치 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 서울: 오름.
- 이용준. (2010).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혼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용준. (2018). 『북핵 30년의 혼상과 진실: 한반도 핵 게임의 종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우태 외. (2018).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전망이론을 통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 임수호. (2007).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 조성외교(1989~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윤영. (2004).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국제관계 연구: 갈등해소와 협상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분석.” 『국제정치논총』. 44(1), 51~70.
- 조정아 외. (2010).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0(12).
- 조화성. (2009). “북한의 전략문화와 핵 협상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49(5), 149~171.
- John Baylis · James J. Wirtz · Colin S. Gray. (2016). 『국제정치와 전략』. 김일수 외 옮김. 서울: 한티미디어.
- 편집부 엮음. (1989). 『주체사상 연구』. 태백총서. 제12권. 서울: 태백.
- 홍용표. (2000).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황일도. (2012). “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행태: 핵무기 개발, 재래식전력 배치, 연평도 포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국외문헌

- Cha, Victor D. (Summer 2002).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2.
- Faure, Guy Oliver and Rubin, J. eds. (1993). *Culture and Negotiation*. Newbury Park, CA.: Sage.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Jacobsen, Carl G. ed. (1990). *Strategic Power: USA/USSR*. New York: St Martin’s Press.
- Johnston, Alastair Iain. (Spring 1995a).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 Johnston, Alastair Iain. (1995b). *Culture realism :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zarr, Michael J. (1996).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 Review Essay,” *Washington Quarterly*, Vol. 19, No. 2.
- Meyer, Stephan M. (1984).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berdorfer, Don. (2001).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 Oberdorfer, Don. and Carlin, Robert. (2013).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vised and updated third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 Park, Kyung-Ae. (July 1997). "Explaining North Korea's Negotiated Cooperation with the U. S.." *Asian Survey*, Vol. 37, No. 7.
- Sagan, Scott D. (Winter 1996–1997).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 Snyder, Jack L. (September 1977).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Nuclear Options.* R-2154-AF. Santa Monia: Rand Corporation.

3. 기타(언론기사, 북한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2017. 3. 31일자.
- 천지일보, “[북미정상회담] ‘격동의 70년’ 북미, 오늘 ‘한반도 평화’ 위한 첫 걸음”, 2018. 6. 12일자.
- Chaitin, Daniel. (2017). “Lindsey Graham: Trump won’t allow the ‘crazy man’ in North Korea to strike the US.”, *Washington Examiner.* 2017. 11. 28.
<<http://www.washingtonexaminer.com/lindsey-graham-trump-wont-allow-the-crazy-man-in-north-korea-to-strike-the-us>>
(검색일: 2019. 12.07.).

ABSTRACT

A Study on the Usefulness of Strategic Culture in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Mechanism of Perception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Policy Preference

Lee, Jeong-Wan

Major in Military Strateg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North Korea has repeatedly been provocative enough to be almost always out of expectations, and a third party's view of the North has even called it a "mad country" according to its psychological hypothesis that the so-called "North Korea" is insane. This view, however, is becau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has been looking at the North Korean issue, and many leading studies, have not deviated from such thinking as rational decision models or optimization of cost-to-effect, and are bound by the simple formula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and paying the corresponding price. In particular, many in the West, including the U.S., say that North Korea is irrational and unpredictable, is attributable to the neo-realistic view that has formed the mainstream of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in order for us to recognize and analyz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more essential respects, we must break away from this old stereotyp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eek a more macro, strategic solution based on a new perception of the situ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want to analyze thes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terms of strategic culture. In a nutshell,

strategic culture refers to a certain mindset of a certain country in using military force to achieve political goals. And given that this strategic culture has consistency that once formed, it does not change easily, the unpredictable policy orientation of a particular country can also find a certain pattern in the "calculated inconsistency" created by its own configured interests.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was introduced by Jack Snyder, a U.S. political scientist, to explain the Soviet Union's unique and irrational strategic behavior in the 1970s when it competed with the U.S. for nuclear weapons. While the U.S. tends to favor deterrence in nuclear war, the Soviet Union concluded that strategic culture formed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 suffered by neighboring countries was a factor that favored preemptive strikes in nuclear war.

Likewise,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experience they experienced during the post-North Korean regime's period and the nature of the cause of nuclear development through this experience, and to refer to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s a theoretical framework.

Looking at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ulture, we have the advantage of seeing the world through the lens they see, not through our own perspective. However, the issue of proof and measurement of concept variables has been disputed as the limit point of strategic cultural theory. In this paper, we tried not to extract only the conceptual variables to overcome them, but to extract the central paradigm of North Korea from the main text and the North's historical experience in order to form an effective framework for analysis, proving that this works together under the mechanism of perception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policy preference. In other words, we want to present the usefulness of strategic cultural theory in analyz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rough empirical evidence by linking North Korea's mechanism of perception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policy preference with the central paradigm, which is the conceptual variable.

【Key word】 Strategic culture, The central paradigm of strategic culture, Juche ideology, North Korean nuclear crisis, Mechanism of perception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policy preference